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 전망과 우리의 대책

길병옥,* 임익순**

Ⅰ. 서 론
Ⅱ. 북한의 군사적 의도
Ⅲ. 수단으로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Ⅳ. 북한의 대남 재래식 군사력 운용 전망
Ⅴ. 우리의 대책
Ⅵ. 결 론

Ⅰ. 서 론

1. 연구 목적

지난 8. 29일부터 9월 2일 어간에 북한의 두만강 중류 지역인 무산과 회령 일대에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큰 홍수 피해가 났다.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1주일 후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 9일 김정은은 수해지역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5차 핵실험을 하였다. 이어서 9. 20일에는 위성 운반용 로켓의 엔진 분출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ICBM에 장착될 로켓에 사용할 수 있는 엔진 분출시험을 한 것이다. 주민들이 죽거나 다친 수해지역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수하들을 통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수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한편으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될 엔진의 분출시험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군대를 앞세워 통치하겠다는 선군

*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정치(先軍政治)로 북한 전역을 병영국가로 만든 김정일로부터 정권을 물려받은 김정은은 결국 주민의 삶은 아랑곳 하지 않고 핵무기를 비롯한 다양한 군사력으로 모든 국내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뿐만 아니라 휴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력과 방법을 동원하여 남한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휴전 이후 북한은 3,040회[1]에 걸쳐 무장병력을 침투시키거나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는 등의 도발을 하였다. 최근의 주요한 도발은 1999년과 2002년에 있었던 두 번의 연평해전으로 이어졌고, 이와 같은 무력도발은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알려진 이후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2004년부터 1년 6개월간의 하전사 복무를 마치고 2005년에 중장으로 진급하였고, 2009년 3월 경 후계자로 지명됨과 동시에 국가안전보위부장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2010. 9월에 대장으로 승진하였다. 2010. 3월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같은 해 11월의 연평도 포격사건은 김정은이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서 군 치적 쌓기의 일환으로 자행된 대표적인 무력도발 사건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이와 같은 도발을 이어가는 것은 그럴만한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 능력은 핵무기와 전략미사일을 포함하여 사이버전 능력과 화학무기 등 비대칭 군사력과 이를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대칭 군사력과 재래식 군사력은 상호 연계 하에 운용되어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비대칭 군사력의 대부분은 미래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재래식 군사력은 당장의 현실적 위협이다. 2014 국방백서를 통해 국방부가 밝힌 북한의 주요 재래식 군사력은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대략적인 수준에서 남한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전체 병력 규모에서 북한은 120만여 명으로 남한의 두 배 정도인 것을 비롯하여 전차, 야포, 다련장 및 방사포, 지대지 유도무기, 전투함정, 상륙함정, 잠수함, 전투기, 공중기동기 등 주요 무기도 수량 면에서 남한과의 차이가 크다.[2]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려고 하고 있다. 김정은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해 지난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국방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반항공경보체계 현대화를 실현하고 각종 대공화력 수단들로 전국을 그물처럼 뒤덮어 조국의 영공을 요새화해야 한

---

1) 『2014 국방백서』, 일반부록8 "북한의 연도별 대남 침투·국지도발 현황", pp. 251~255.

2) 『2014 국방백서』, 일반부록3 "남북 군사력 비교", p. 239.

다."[3]고 하였다. 이는 김정은이 핵무기와 전략미사일 등 비대칭 군사력 못지않게 재래식 군사력 증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과 김정은 어떤 목적으로 재래식 군사력을 동원하여 남한에 대한 무력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 북한과 김정은의 도발은 어떤 의도하에 자행되고 있는 것인지가 중요해 진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국가를 운영하는 법체계와 노동당 일당독재체계에 명시된 바와 같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사유(私有) 국가이다. 2012년 개정된 북한 헌법 서문에 명시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는 내용과 동법 11조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4], 그리고 2012년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의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이다."에서와 같이 북한은 김정은의 노동당이 운영하는 사적인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이용한 도발은 법체계보다 우선하는 김정은의 노동당 규약의 목적에서 나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명시된 노동당의 목적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김정은의 북한 정권에 대한 3대 세습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을 위한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김정은의 노동당과 북한군이 재래식 군사력의 건설과 운용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수단으로서의 재래식 군사력을 어떤 방향으로 증강하고 유지해 나갈 것인지, 또한 그 군사력을 어떤 방법으로 운용하여 우리에 대한 도발과 전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응하여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목적을 두고 진행할 것이다.

2. 선행 연구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연구는 전략적 군사력인 핵무기나 미사일의 위협을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대표적으로 북한군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해 연구한 것은 이정우(2014)와 이춘근(2012)이다.

이정우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평가와 대남 군사위협의 변화(2014)"에서 북한의 군사력

---

3) 『아시아투데이』 2016. 5. 8일 기사

4) (사)한국대통령학연구소, 『북한의 최신 법체계 연구』, 2009, pp. 109~111.

을 과대평가함으로써 한반도에 안보 딜레마가 과대 인식되어 군비경쟁이 가속되는 현상이 나타남으로 북한의 군사비 지출과 경제력을 토대로 북한 군사력의 평가와 북한군의 위협 변화를 살펴서 한국의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북한과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의 상호비교를 통해 한국과의 국력 격차가 43배에 달함으로 1970년대의 시각으로 군사위협을 평가하는 불합리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군사력을 단순 수량비교 방법, 전력지수 평가방법, 워게임 방식 비교, 군사비 투자 누계 방법 등으로 평가함으로써 북한은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정우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능력, 수준, 지표로 평가하고 2012년 기준으로 능력은 0.01 : 0.08로, 수준은 0.2 : 2.2, 지표는 1.2 : 8.0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위협 수준의 평가와 추이는 재래식 군사력으로 한정할 때 2012년 기준으로 0.8 : 9.2로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군부가 비합리적인 군사력 증강에 정책초점을 둘 경우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정우는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미래 구상을 위해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적절한 방향의 군비증강 계획, 효율적 군사개편과 무기 첨단화가 필요하며, 북한과의 소모적인 재래식 군사력 경쟁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춘근은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위협 현황과 대응방안(2012)”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핵무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범위에서 분석평가하고 결론으로서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을 중심으로 북한이 싸울 수 있는 전쟁, 싸우고 싶어 하는 전쟁에 대해 다섯 가지의 시나리오로 제시하였다.

이춘근이 제시한 시나리오는 ① 북한군이 직접 개입하는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② 바다를 넘어 육지에 대해 도발할 가능성, ③ 미국군의 개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지할 수 있는 분쟁을 야기할 것, ④ 북한은 한국의 취약한 영토(도서 포함)를 기습 공격해서 점령할 가능성, ⑤ 북한은 한국국민들이 영토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대해 포 사격 등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도발 유형으로서 부대와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① 한국의 내륙 깊숙한 지역에 특수부대 투입, 혼란 야기, ② 중거리 미사일을 운용하여 미군증원을 차단하기 위한 일본 내 미군기지 공격, ③ 잠수함을 이용하여 한국 내 10여 지역에 침투부대 투입, ④ AN-2기를 이용한 침투부대 운용 등이 그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2012년 김정은의 권력 승계 이후 진행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SLBM 발사 시험 등으로 인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평가가 한국에 비해 열세라는 경도된 시각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에 대한 인

식도 낮아지고 있으며, 북한과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 경쟁은 의미가 없다는 관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실제적인 위협으로 언제든지 제2의 천안함 격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적인 도발이 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위협에 대한 평가와 대비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3. 연구 방법

손자는 '모공(謨攻)편'에서 싸우지 않고 적의 모략을 꺾는 것이 최상의 용병술이라고 하였다.[5] 손자의 이 말은 적이 우리에게 가해오는 위협은 적의 모략 또는 의도에서 출발하므로 이 모략을 쳐서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적이 어떤 의도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그 군사력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적의 모략이나 의도를 꺾을 수 없다면 주변국으로부터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차선책이다. 그것도 어렵다면 직접 적의 군대를 쳐서 승리하는 것이 차차선책이다. 또한 데이비드 슈프(David M. Shoup) 전 미 해병대사령관은 적의 위협을 평가할 때 적의 능력과 의도, 취약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 의도는 특정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 국가의 결의를 말하며, 제반이익, 목표, 정책, 원칙 및 공약 등으로 형성되는데 이러한 적의 의도 자체가 위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적이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인가를 판단하려면 적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4조와 5조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의 서문에 노동당의 목적이 남한을 포함한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표현은 1970년 제정 시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란 목적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한 것으로 결국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남한에서 미군을 축출하고 남한 내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지원하여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군을 축출하기 위해 핵무기와 전략미사일에 매달리고 있으며, 남한 내의 갈등을 확대하고 지지세력 결집과 지원을 위해 부단히 재래식 군사력을 동원하여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도발은 방자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약점인 모든 곳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손자병법』, 모공편,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 고상병벌모, 기차벌교, 기차벌병, 기하공성: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故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

6) 이종학 편저, 『군사전략론』, 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9, p. 15.

북한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도외시 한 채 오직 군사력 증강에만 매달려 현재와 같은 규모로 확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북한이 건설한 재래식 군사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군사력의 수준이 남한에 비해 열세라는 주장도 있지만 수준의 평가와 관계없이 북한의 군사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실제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군사력의 특성인 과도성, 불투명성, 공격성, 군사제일주의 등[7]은 북한의 폐쇄적인 국가 운영과 결합하여 불확실성을 증폭시킴으로써 위협의 수준을 측정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한 재래식 군사력은 그들의 의도와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북한의 도발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며, 이러한 의도는 아무리 단순한 도발도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여건만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면 적화통일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략적 모호성과 노출성을 배합하여 우리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직접적인 위협과 간접적인 위협을 병용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또한 전술적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자행하여 남한의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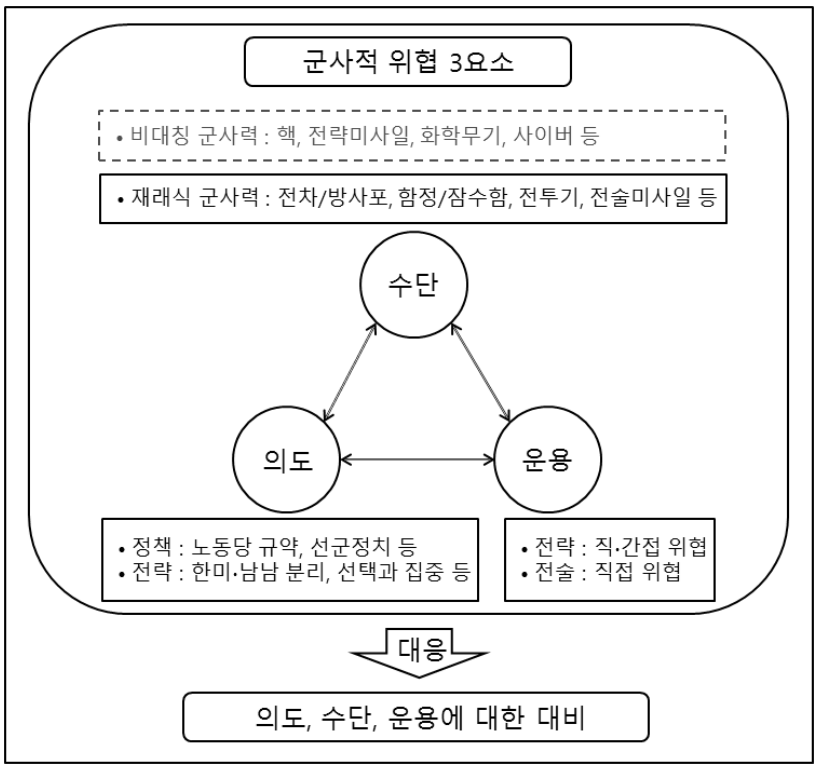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위협은 북한과 김정은의 의도가 출발점이며, 그 의도에 따라 건설된 군사력과 그 군사력을 운용하여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북한의 김정은이 가해 오는 의도와 수단, 운용 등 세 가지의 위협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대비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갖는 실제적인 세 가지 위협 요소들을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문헌연구를 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은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

7) 송대성, 『남북한 군사력특성과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세종연구소, 2002, pp. 50~65.

[그림 1-1] 북한의 군사적 위협 3요소와 대응 분석틀



Ⅱ. 북한의 군사적 의도

1. 북한의 군사 정책적 의도

가. 북한의 법체계에 나타난 의도

헌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의 규범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의 원칙을 정하며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등 국가 정책의 단초가 되는 기본법칙을 가리킨다. 북한의 헌법도 형식적으로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정치체제와 공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정치조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헌법이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고 국가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최고의 규범으로 보고 있다.[8] 그

---

8) 정응기,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기본원리-주체사상”, 『법학연구』 51-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러나 1998년 헌법 개정 시 신설한 서문을 개정한 2012년 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사업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라고 규정함으로서 헌법 자체를 사유물화 하였다.

북한은 헌법을 통해 우선적으로 조선노동당 유일의 지도 아래 집단주의적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제1장 정치 분야의 제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명시하여 노동당의 유일한 지도를 받도록 하였다. 제10조에는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고 하였고, 제4장 국방분야의 제58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고 하였으며,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분야의 제6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라고 명시하였다.[9)]

한편, 국방에 대한 규정인 제4장에서는 제60조에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에 “국가는 군대 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 무장력(군사력)의 사명을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는데 있다’고 밝힌 제59조를 보완하는 북한 군사력의 건설과 운용에 대한 의도를 명시한 것이다.[10)]

북한의 헌법 제11조에 따라 북한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최고의 권위를 조선노동당에게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헌법의 지위를 김일성 일가 통치자들의 국가통치체제에 대한 대외적인 명분에 불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헌법이 명목상으로는 최고 규범에 해당하므로 북한의 국방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방향은 분명히 제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열거

---

p.220.

9) 법무부, 『북한법령 연구』, 서울: 성진사, 2012, p. 714. “북한 사회주의헌법: 2012년 개정” :
제1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 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5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6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한다.

10) 법무부, 앞의 책, pp. 721~722.
제60 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 조 국가는 군대 안에서 혁명적 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 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한 북한 헌법에 나타난 국방 및 군사정책적 의도는 사회주의 사상 및 주체사상을 혁명적으로 받드는 '집단주의'라는 원칙 아래 '병영국가(兵營國家)' 체제를 기본법칙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4대 군사노선으로 명시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는 전 국토를 군사기지화 하며 전 국민을 무장력(군사력)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적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66년 노동당 제2차 대표자대회에서 4대 군사노선을 확정한 이래 지속적인 군비증강과 함께 전국을 군사기지화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적 의도는 현재의 김정은 정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시작되는 단초인 것이다.[11] 아울러 2009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 선군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반영함으로써 군사적 활동이 국가의 정책적 사업들 중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나. 조선노동당 규약에 나타난 의도

북한의 헌법이 최고규범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헌법 11조에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조선노동당을 움직이는 규약의 기능이 헌법보다 상위에 있도록 하였다. 조선노동당 규약은 1946년에 처음 제정된 이래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동 규약은 1970년 제5차 당대회를 통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지침으로 내세웠고, 1980년 개정에서 김정일의 선군혁명 역량을 향도적 역량으로 규정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6. 5월 제7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을 당위원장에 추대하도록 규약을 개정하였다. 북한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측면의 의도는 규약의 전문(前文)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조선노동당의 성격을 규정한 전문의 분석을 통해 북한을 통치하는 당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 제5차 당대회 시 개정된 규약은 "조선로동당은 우리나라 로동계급과 로동대중의 선봉적 조직부대이며 우리나라 로동대중의 모든 조직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이다."라고 규정하였고, 1980년 개정 시에는 "조선로동당은 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명 맑스닌주의당이다."라고 하였으며, 2010년 개정 시에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로, 2012년 개정을 통해서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이다."라고 명시하였다.[12] 북한은 규약의 개정을 통해 조선노동당이 결국은 맑스레닌주의당으로부터 김일성 일가의 사적인 당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맑스레닌의 공산주의 혁명 노선을 이어받았지만 김일성의

---

11) 서주석, "북한의 군사력과 국방정책", 『북한의 체제와 정책』, 서울: 명인문화사, 2014, p. 172.

12) 북한은 2016년 5월,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의 개정을 통해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해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 전위부대"라고 적시함으로써 김정은을 노동당과 무장력(군사력)의 중심에 놓도록 하였다.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통해 북한식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혁명을 전개하는 노동당이 통치하는 국가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조선노동당 규약의 전문은 또한 당의 당면목적을 명시함으로써 그들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1970년 개정 이래 매번 개정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해 왔다. 1970년 개정 시 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하여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이 최종목적이라고 하였다. 이후 최근의 개정인 2012년 규약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 - 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고 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통한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실현이 최종목적임을 밝혔다.[13] 최근의 개정을 통해 밝힌 '김일성-김정일주의화'라는 표현과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이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는 다음의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동안의 규약개정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표 2-1〉 북한 조선노동당 당면목적의 변화

연도	내용	특징
1970년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 북한 내 사회주의 승리 • 전국적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 공산주의 사회 건설
1980년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 북한 내 사회주의 승리 • 전국적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 주체사상화 및 공산주의 사회 건설
2010년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 북한 내 사회주의 강성 대국 건설 • 전국적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 주체사상화 및 자주성 실현
2012년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 - 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 북한 내 사회주의 강성 국가 건설 • 전국적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 김일성-김정일주의화 및 자주성 실현

13) 법무부, 앞의 책, p. 688.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 :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 - 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을 기술하는 형식은 북한 내부적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완성으로부터 남한을 포함한 전 한반도로 확대하고 나아가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단계적 확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목적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공산주의라는 이상적 사회의 건설을 포기하고 과도기적 사회인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했다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은의 선군사상을 묶어 '김일성-김정일주의'로 과대망상적으로 격상시켜 전 세계를 김일성 일가의 세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혁명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로 개조하는 것을 완성하는 대상을 '공화국 북반부'에서 '전국적'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남한을 사회주의화해야 하는 즉, '적화(赤化)'하겠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것으로써 조선노동당의 목적이 남한 내의 동조세력을 규합하고 지원함으로써 전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겠다는 북한의 의지의 표명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14]

남한을 '적화'의 대상으로 삼고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는 규약의 후반부 통일에 대한 의도에 드러나 있다. 조선노동당의 통일관은 1970년에 개정된 규약에 "조선로동당은 조국의 자주평화통일 로선을 관철하며,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며,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괴뢰정권을 타도하고 정권을 쟁취하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괴뢰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남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라는 명문을 통해 밝혀져 있다. 이후의 개정을 통해 이 내용은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로 변화하였지만 '남조선 인민들을 지지성원한다.'라는 명문은 1970년의 규약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 내의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남한의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의 의도대로 통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변함없이 천명한 것이다. 특히 2010년 개정 시 반영된 "조선노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역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라는 표현은 앞에서 제시한 북한의 통일관과 연계되어 북한의 통일정책과 대남정책의 근원이 되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법적인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을 법적 근거로 하여 소위 '민족담론투쟁 통일전선'[15]을 구축하기 위해 정치와 군사를 배합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장점인 개방성과 다양성을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혁명과업 완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

14) 김태현, "북한군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 『전략연구』22권 2호, 2015, pp. 169-170.

15) 김동성,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전술과 대남 정치심리전", 『전략연구』57호, 2013, pp. 326-327.

2. 북한의 군사 전략적 의도

북한의 정치적 목적, 즉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용해야 한다. 어떤 군사력을 얼마나 건설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군사적으로 보장할 것인가가 군사전략적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포괄적 의미로 보면 군사전략이란 군사력의 건설, 군사력의 배비, 군사력의 운용에 대한 과학(science)과 술(art)로 정의된다. 아더 리케(Arthur F. Lykke)는 군사전략을 목표-수단-방법으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버나드 브로디(Bernard Brodie)는 "평시의 군사전략은 대부분 무기체계의 선택"이라고 하였다.[16] 이 외에 여러 사람들이 정의한 군사전략을 종합해 보면 "군사전략 = 군사목표 + 군사전략개념(방법) + 군사자원(수단)"이라는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17] 따라서 군사전략적 의도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와 수단, 방법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단기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해야 할 군사력의 규모나 종류, 그리고 그 수단을 운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구상 등을 군사전략적 의도인 것이다.

북한은 정치적 목적, 즉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인 남한의 적화혁명 완성을 달성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전쟁'을 추구해 왔다.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남한의 방위태세를 무력화 하는 것이 선결조건인 바 이러한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지속적인 여건조성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18] 또한 북한은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전면적인 "민족해방전쟁"이라는 결전(결정적인 전역: decisive campaign, 결정적 전투: decisive battle)을 시도할 것이다.[19] 여기서는 북한의 군사전략적 의도를 '민족해방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여건조성 시기와 결전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가. 여건조성 시기의 군사전략적 의도

북한의 소위 '혁명적 무장력(군사력)'은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지만 전 한반도에서의 사회주의 완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민족해방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들의 군사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군사적 의도는 그 목적을 달성할

---

16) 김태현, 앞의 논문, p. 172.

17) 이종학 외, 『현대전략론』,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pp. 178~185.

18) 이윤규, 『북한 대남 침투도발사』, 파주: 살림출판사, 2014, p. 97.

19) 박창희, "전략의 패러독스: 비대칭전에서의 '결전'과 '약자의 승리'", 『한국정치학회보』43권 1호, 2009, p. 324.; 김태현, 위의 논문, pp. 169~170.

수 있는 일부의 군사력, 즉 특정 병종의 극히 일부의 전력이나 특수부대의 일부 전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아더 리케는 군사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서 상황판단을 포함시켰는데[20], 이때 적과 아군의 강점과 취약성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남한의 강점과 취약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물론 북한의 의도 파악에는 그들의 법체계만큼이나 복잡하고 명목과 실제에 있어서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마치 게임 이론에서 등장하는 '한 쪽이 상대방의 수익구조(payoff structure)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비대칭적 정보게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21] 북한은 자신의 의도를 숨긴 채 우리의 의도와 취약성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제안이나 방법은 수용하고 불리하면 거절하거나 파기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태 중 일정한 방향성을 띄고 있는 것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들의 군사전략적인 의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결정적인 군사행동인 대규모 군사력이 동원되기 전에 추구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는 그들이 판단한 우리 남한 사회의 취약점을 지향할 것이다.

북한이 판단하는 남한의 군사적 안보의 강점은 견고한 한미동맹에 있으며, 남한 사회의 취약점은 우리 스스로는 강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북한보다는 개방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비교적 자유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과 다양이라는 자유주의적 사회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갈등구조는 태생적으로 취약점을 배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 안보의 강점을 약화시키고, 취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국가 전체의 힘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이 여건조성 시기의 군사력을 운용하는 군사전략적 의도는 바로 한미동맹의 약화와 남남갈등의 확대를 통한 국력의 약화[22]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 시기에 군사력의 일부를 동원하여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약점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2010년의 천안함 폭침 도발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이 주한미군이 개입하기 어려운 한국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공략하여 한미 간의 이견을 노출[23]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철수에 기여할 수 있는

---

20) 이종학, 앞의 책, p. 353.

21) 모종린, "북한 의도의 불확실성과 남한의 대북정책", 『전략논총』10호, 1998, p.81.

22) 구본학, "북한의 도전: 배경, 전망, 한국의 대응", 『국제관계연구』 14권 2호, 2009, pp. 11~12.

23) 박휘락, "북한 도발 시 '단호한 대응'과 '확전방지' 조화방안: 자위권과 교전규칙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54호, 2012, pp. 115~116.;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응징과 자위권 행사, 확전방지라는 개념이 상충함으로써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사의 임무와 대한민국 방위라는 주한미군의 역할, 남한 자체의 응징과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이견이 노출되기 쉬운 '전략적 경계선'에 대한 북한의 교묘한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적 시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아울러 2015년 비무장지대 내의 GP 통문에 지뢰를 매설한 것과 같이 직접적인 군사력 운용은 남한 내의 다양한 의견 제시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확대함으로써 국력의 낭비와 국론의 분열을 통해 결정적인 군사력 동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남 통일전전선 전략의 수행의 일환으로 지지세력을 통해 남한 내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끊임없이 그들의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24]

나. 결전 시기의 군사전략적 의도

결전은 영토의 점령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적인 도발이 아니라 비교적 대규모 군사력 또는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남한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적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25] 북한이 이러한 결전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충분할 정도의 남한 내 지지세력의 결집이 될 것이다.[26] 물론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나 남한 내 지지세력의 충분한 결집이 없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결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의 상황 등 급격한 상황변화를 대규모 군사동원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전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27]

북한이 결전을 시도할 때의 군사전략적 의도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목표가 남한 영토의 일부 점령이든 전체 석권이든 기습공격과 배합, 속전속결을 추구하는데 있을 것이다.[28] 북한의 전통적인 군사전략으로 알려진 세 가지 전략은 김일성의 유훈처럼 존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략을 구상한 이유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판단이 기저에 깔려 있다. 우선 한반도는 70%에 달하는 산악지형과 동서 방향의 폭이 좁고 남북 방향의 종심이 비교적 깊지 않으며, 특히 남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 서울이 휴전선과 근접해 있어 기습과 속전속결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의 주민들과 달리 남한에는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잔존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이 발달해 있어 다양한 종류의 군사력을 배합하여 남한 내에 혼란을 조장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 북한의 군사전략적 의도는 그들의 강점을 발휘하고 남한의 약점을 타격할 수 있는 방향에 지향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의 기습전략은 김일성의 1969년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제4기 4차 당

---

24) 김동성, 앞의 논문, pp. 343~344.
25) 박창희, 앞의 논문, pp.326~328.
26) 김동성, 위의 논문, pp. 322~323.
27) 김태현, 앞의 논문, pp. 196~197.
28) 2014 국방백서, p. 24.

군 전원회의에서 “전쟁을 위한 유리한 여건의 조성은 평상 시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추고, 기회가 오면 기습을 통해 상대의 전략적 요충지를 신속히 무력화시키고 그 지역을 신속히 석권해야 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상대의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29]고 지시하였다. 배합전략은 김일성의 주체전법으로 알려져 있는 바, 1970년 5차 당대회에서 “한반도의 지형조건을 잘 이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잘하고,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하면 최신 군사기술로 무장한 적이라도 격멸할 수 있다.”[30]고 강조하였다. 또한 속전속결 전략은 손자의 군사사상에서 연유된 전통적인 군사전략이론의 하나이지만, 특히 김일성은 6.25전쟁 시 지구전으로 전환되면서 남한을 적화통일하지 못한 경험으로부터 속전속결을 군사전략의 대강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Ⅲ. 수단으로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1. 북한 재래식 군사력의 역사적 변천과정

북한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또는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이라는 군사정책적 의도와 군사전략적 의도 아래 6.25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왔다. 최근에는 핵무기의 개발과 전략적 미사일의 개발을 포함하여 사이버전 능력까지 확충하면서 비대칭적인 군사력의 증강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증강도 그들의 의도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2016년 9월의 기고문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이나 핵프로그램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려 있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 재래식 군사력 향상에도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한다.”[31]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1948. 2월에 소위 ‘조선인민군’을 창설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의 정부 수립보다 7개월이나 먼저 창설된 인민군은 레닌의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라는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무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 그리고 김일성의 합작품이다. 북한군의 창설 목적은 국가방위의 개념을 뛰어 넘어 남한에 대한 무력 적화통일에 있다는 것이 ‘조선인민군’ 창설식에서의 김일성 연설에 나타나 있다.[32] 이러

---

29) 김일성은 1969. 1. 6일의 제4기 4차 군당 전원회의에서 기습에 대해 이와 같이 교시하였다.

30) 김일성은 1970. 11. 2일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있었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전 인민적·전 국가적 방위체계의 수립에 대해 이와 같이 지시하였다.

31) 구글검색 자료, “북 재래식 군사력 증강에도 주목해야”,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e-yh-09012016164400.html (북한군 재래식 전력, 검색일 : 2016.9. 7)

한 북한군의 목적은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다양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소련의 공산주의 확장정책과 김일성의 전 한반도에 대한 공산화 야욕이 북한군의 증강을 야기한 근원이었던 것이다. 북한군은 창설 이후 소련과 중공의 지원에 의해 구축한 6.25전쟁 전의 군사력과 전쟁 기간 중의 군사력을 토대로 전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확대해 왔다. 북한군의 군사력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며 증강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현재의 북한군이 어떠한 의도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창설기(1948~1950)

1945년 북한에 진주한 소련은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을 공산주의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군대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소련 군대에서 복무한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군대를 창설하고 소련식 편제와 장비로 무장시켰다.[33]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소련은 1946. 1월에 평양에 본부를 둔 철도보안대를 창설하였다. 이것은 철도경비가 부족하다는 명목 하에 각 도별 철도보안대를 양성시켜 즉시 군대로 전환할 준비를 갖추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어서 1947. 2월에는 정규 군사력을 지휘할 군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평양학원을 설치하였다. 평양학원은 김일성 직계의 빨치산 출신들이 장악하였으며,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에서 핵심 분자들을 선별하여 입교시키고 소련군 출신 한인들이 교관이 되어 정치교육과 군사교육을 병행하였다. 아울러 한만 국경 부근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강계·중강진·갑산에 공군·전차·포병·게릴라 등의 훈련소를 만들어 중견간부를 양성하였다.

이러한 준비를 거쳐 소련군으로부터 각종 중화기를 넘겨받고 소련군 고문관의 지도를 받은 북한군은 1947. 5월부터 1948. 2월까지 급성장하여 창설식 당시에는 2개 보병사단과 1개 혼성여단 규모로 확대되었다. 또한 1945. 10월에는 '신의주 항공대'를 조직하였고, 1947. 5월에 제115전차연대를 창설하였다. 1948. 9월 북한의 정부를 수립하면서 소련의 비호 아래 정권을 장악한 김일성은 인민군 총사령부를 '민족보위성'으로 승격시켜 4개 사단으로 증편된 북한군을 통합 지휘하도록 하였다.

---

32) 『김일성 선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pp. 356-359. 김일성은 1948. 2. 8일 평양역전 대광장에서 있은 '조선인민군 창설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오늘 우리가 인민군를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 완전 자주독립을 일층 촉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영웅적인 소련군대가 우리민족을 해방시켜준 후 2년이 넘는 동안에 민주주의 완전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모든 토대를 튼튼히 닦아 놓았습니다. 둘째의 목적은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북조선인민들의 그 고귀한 사업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인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해서 입니다.";

33) 박헌옥, "6·25전쟁에서 김일성의 역할과 북한군의 전쟁수행", 『군사 63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7. pp. 68~69.

1949. 3월 스탈린과 김일성은 '조·소 비밀군사협정'과 '조·소 경제문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6개 사단과 3개의 기계화부대 등 약 7개 사단 규모의 육군과 전투기 100대를 포함한 15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공군을 편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49. 5월에 제115전차연대를 T-34 전차 242대를 보유한 제105전차여단으로 증편하였으며, 독소전쟁 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조선인 병력 5천명을 입북시켜 105전차여단에 배치하였다. 1949. 4월에는 조·중회담 합의에 따라 중공군 제165사단, 제166사단, 독립 제15사단과 중공 내 각지의 조선의용군 등 6만3천여 명이 1949. 7월부터 1950. 5월까지 북한군에 편입되었다. 1950. 1월에는 스탈린의 남침 승인 아래 3개의 민청훈련소를 승격하여 제101315사단으로 편성함으로써 북한은 10개의 사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문적인 유격전투부대를 양성하기 위해 재945육전대와 제766유격연대를 창설하였다.[34] 이어서 북한은 제12모터사이클 정찰연대를 창설했는데, 이부는 1949. 8월 중공에서 입북한 조선의용군 출신 약 2천명을 기간으로 540대의 모터사이클과 각각 16문의 45mm 대전차포와 120mm 박격포를 보유한 총 3500명 규모의 북한군 유일의 기동화된 독립연대였다.

북한의 해군은 1948년까지 내무상 산하 해안경비대로 있다가 1949. 8월에 민족보위성으로 관할이 전환되면서 해군으로 정식 편제되었다. 북한 해군의 당시 장비는 소련의 지원으로 30여 척의 대·소형 함정이었다. 한편, 북한의 공군은 1948. 9월에 비행대대가 비행연대로 증편되었는데,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한 1949. 3월 150대의 항공기(전투기 100대, 폭격기 30대, 정찰기 20대)를 제공받아 항공사단으로 증편하였다. 이후 1950. 4월부터 1950. 6월까지 IL-10, UAK-9 등 120여 대를 지원받아 22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다.[35]

나. 독자적 확장기(1953년 이후)

북한군의 전체적인 규모는 6.25전쟁 이후 1950년대에는 종전 당시 수준인 약 40만 명의 병력을 유지했지만 장비의 현대화와 공군력의 증강에 주력하였다. 여기에는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1950년대 전반기에만 2천여 대의 전차와 자주포, 800여 대의 항공기를 북한에 제공하였다.[36] 북한군이 소련의 지원으로부터 독자적인 군사력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1955년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처음으로 내세운 뒤 1956년 소위 '8월 종파사건'을 겪으면서부터이다. 1958. 10월에 중공군이 철수하면서 조·중연합사예하 최고사령부를 해체하고 독자적인 군사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62.

---

34) 고재홍, 『한국전쟁의 원인』,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pp. 217~219.

35) 육군본부, 『1129일 간의 전쟁 6.25』, 계룡: 국군인쇄창, 2014, pp. 51~52.

36)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건과 발전, 1945-1990", 『북한 군사문제의 재조명』,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pp. 114~115.

10월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 쿠바 미사일 사태 등에서의 소련의 태도에 반대하여 반소(反蘇) 노선을 밝히고, 그에 따른 군사 부문의 약화에 대비하여 그해 12월 노동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국방에서의 자위'와 '경제건설과 군사력 건설의 병진' 정책을 채택하면서 전체 예산의 1/3을 국방 분야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1963년에서 1965년까지 소련으로부터의 원조가 중단되어 군사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자 반소 노선을 철회하였다. 중공과는 1966년 문화혁명기에 반김일성 구호가 나타나면서 반중(反中) 입장까지 확대되면서 독자 방위노선을 걷게 되었다.[37]

북한의 독자적인 방위노선에 따른 군사력 증강은 1966년 노동당 제2차 대표자대회에서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라는 '4대 군사노선'을 밝히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군비증강을 통한 남한에 대한 군사모험주의의 시도인 1.21사태와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이후 유격전이 중시되는 경향이 부각되었고, 베트남전쟁의 교훈에 따라 '배합전술'을 내세워 경보병 및 특수부대를 대폭 증강하게 되었다. 북한군은 1차 군비의 확충이 거의 마무리된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시금 정규전을 중시하게 되어 정규군의 군구조를 기동작전에 적합하게 변환하고, 총참모부가 군을 직접 지휘하게 하는 등 지휘계통을 단순하게 하였다. 이 시기부터 북한군의 정규 군사력이 대폭 증강되어 1960년대까지만 해도 44만 명 수준이던 병력의 규모가 80만 명 수준까지 증가하였고 대부분의 군사장비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1970년대 말에는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군사교리의 발전을 추진하였고, 1980년대에는 기계화군단 등을 창설하여 기습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예비전력을 정규군 수준으로 증강하였다. 아울러 이 시기에 비정규전부대를 전후방 부대 모두에 할당하는 등 정규군과 특수부대를 결합함으로써 북한 고유의 소위 '주체전법'을 체계화하였다. 1980년대에는 남한의 군비증강에 따른 한미 연합군의 재래식 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스커드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김일성의 후계체제 확립 의도에 따라 군의 정치사상적 무장강화를 강조하면서 군권확립에 주력하였다. 1992년의 걸프전 등 미국이 주도하는 탈냉전시기의 첨단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방어작전 강화를 위한 갱도공사와 지하화, 허위진지 구축 등을 통한 효과적인 기만작전의 수행과 전쟁예비물자의 비축을 추진해 왔다. 특히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뒤 식량난이 가중되자 군민일치 운동에 기초한 군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각종 자원을 군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등 군을 중시하고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비상시의 체제 위기상황에서 군 중심의 위기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선군정치'를 시행함으로써 군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북한군이 6.25전쟁 이후 시기별로 군사력을 증강하고자 했던 시도

---

37) 서주석, 앞의 책, pp. 171~172.

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북한 재래식 군사력의 증강 추이

구분	병력(만 명)	전차(대)	야포·방사포(문)	미사일(기)
1970년대	50	1,500	3,000	없음
1980년대	75	2,200	5,000	개발·생산시작
1990년대	100	3,500	11,000	400
2000년대	110	4,000	13,000	600
2014년	120	4,300	14,100	발사대 100기

* 출처 : 이민룡의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대 해부』(서울: 황금알, 2004, p. 108)를 『2014 국방백서』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일부 수정함.

북한의 이와 같은 재래식 전투력의 건설은 1985년부터 시작된 미사일과 핵무기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야포와 방사포 등 다량의 추진체 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전술적 무기의 확충에도 많은 투자를 해왔다. 이는 전략무기인 핵과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술적 무기를 개발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북한의 재래식 전투력의 건설과 확충은 결국 전략적 무기의 한계인 직접 사용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술적 무기도 이와 병행하여 확충을 해야만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현존 북한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요소

북한군은 지상군 102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2만 여명으로 총병력은 120만 여명이며 인구대비 병력비율이 5%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아울러 북한의 전 사회를 거대한 병영체제로 구축하여 '4대 군사노선'에 따라 전 인민을 무장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은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전시동원 대상으로 함으로써 770만여 명의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15~30일 동안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비전력은 전투동원 대상인 교도대가 60만 여명, 향토예비군 성격의 노농적위대가 570만 여명, 중학교(고급반)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가 100만여 명이다. 이 중 교도대는 인민무력부가 직접 통제하고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는 당 민방위부가 통제하고 있다.[38] 예비전력보다 훨씬 위협적인 북한군의 주요 군사력인 지상군과 해군, 공군의 전투력 현황과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위협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38) 국방부, 『2014 국방백서』, p. 28.

가. 지상군

북한의 지상군은 총병력 102만여 명의 대규모 조직으로 10개의 전후방 군단, 2개의 기계화군단, 평양방어사령부, 11군단, 1개의 기갑사단, 4개의 기계화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중 주요 전투부대는 88개 사단과 72개의 기동여단(교도여단 미포함)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의 지상군은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전체 전력의 70%를 배치하고 있어 유사시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이 가능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방 지역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우리의 수도권에 대해 기습적인 대량 집중사격이 가능하여 위협적이며, 최근 시험개발 중인 300mm 방사포는 최대사거리를 고려할 때 중부권까지 사격이 가능하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안지역에 집중 배치된 해안포와 방사포, 전진 배치된 상륙 및 공중 전력은 우리의 서해 5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상시 기습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의 지상군은 전차, 포병 및 기계화부대 등 거의 모든 부대가 경량화·기동화 되어 있다. 기갑부대와 기계화부대는 주력전차인 T-54, T-55 전차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부대의 장비 현대화를 위해 T-50 계열의 전차를 T-62 전차의 성능을 개량한 천마호와 선군호 전차로 교체하여 기동력과 타격력을 대폭 보강하고 작전의 융통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아울러 특수전 전력은 11군단과 전방 군단의 경보병 사단, 전방 사단의 경보병 연대 등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부대들로 다양하게 편성된 20만 여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특수전 전력은 유사시 땅굴 및 비무장지대 침투대기시설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하여 남한 전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하여 주요 부대 및 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지역에 대한 교란과 혼란 조성 및 배합작전 수행 등으로 역할이 확대되어 있다.[39] 북한 지상군의 주요 장비는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 북한 지상군의 주요 장비 보유 현황

구분	전차	장갑차	야포	방사포	지대지 유도무기
현황	4,300여 대	2,500여 대	8,600여 문	5,500여 문	100여 기

* 출처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p. 26.

나. 해군

북한의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동해 및 서해의 2개 함대사령부와 13개의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 해군 부대들은 총 전력의 60%가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되어 있어 상시 기습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해와 서해의 지형적인 분

39) 국방부, 『2014 국방백서』, p. 25.

리로 융통성 있는 작전이 제한된다. 또한 주로 소형 위주의 전투함으로 구성되어 원해 작전 능력이 제한되며, 수동재래식 무기를 탑재하여 정밀공격 및 야간작전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40]

북한 해군의 수상전력은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작전과 연계하여 지상군의 진출 지원과 연안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하지만, 전진배치되어 있어 해안포와 지대함 유도탄부대의 지원을 이용하여 전방해역에서의 기습공격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는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종류의 고속특수선박을 건조하여 수상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수중전력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교통로 차단, 기뢰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 부대의 침투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신형 어뢰 개발에 이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등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을 지속적으로 건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수중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상륙전력은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 260여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전 부대를 후방지역에 침투시켜 주오 군사전략시설을 타격하고 상륙해안의 중요지역을 확보하는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41] 북한 해군의 주요장비 현황은 다음의 〈표 3-3〉과 같다.

〈표 3-3〉 북한 해군의 주요 장비 보유 현황

구분	전투함정	상륙함정	기뢰전함정 (소해정)	지원함정	잠수함정
현황	430여 척	260여 척	20여 척	40여 척	70여 척

* 출처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p. 27.

다. 공군

북한군의 공군은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 예하에 4개 비행사단과 2개의 전술수송여단, 2개의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 공군전력은 서남부·서북부·동부·동북부 등의 4개 권역으로 나뉜 북한 전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주요 전력인 전투임무기 820여 대의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의 기지에 전진배치하고 있다. 비행기지는 20여 개의 작전기지를 포함하여 예비기지와 비상활주로를 다수 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작전기지는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하격납고와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다.[42]

북한의 공군전력은 항공기의 추가적인 배치나 조정을 하지 않고도 남한의 지휘통제시설,

40) 서주석, 앞의 책, p. 177.

41) 국방부, 『2014 국방백서』, p. 25.

42) 국방부, 『2014 국방백서』, p. 27.; 서주석, 앞의 책, p. 178.

방공자산, 산업시설 등을 기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아울러 AN-2기와 헬기를 이용하여 대규모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고, 최근에는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를 생산하여 배치하고 있다.

북한의 방공체계는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를 중심으로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방공부대 등을 통합하여 구축되어 있다. 1차적인 방공임무는 4개 권역에 배치된 해당 비행사단에 위임되어 있다. 전방지역과 동서 해안 징역에는 SA-2와 SA-5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였으며, 평양지역에는 SA-2와 SA-3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를 집중 배치함으로써 다중의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상관제요격기지, 조기경보기지 등 다양한 레이더 방공부대가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되어 한반도 전역을 탐지할 수 있으며, 레이더 방공부대의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작전 대응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자동화방공지휘통제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북한의 전투기는 수량 면에서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만 주요 기종의 구형화·노후화와 1990년대 이후 성능개량의 지연으로 대부분의 항공기가 야간작전능력과 정밀공격능력이 제한되고, 실제 전력 발휘에 많은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43] 북한 공군의 주요 항공기 보유 현황은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4〉 북한 공군의 주요 장비 보유 현황

구분	전투임무기	감시통제기	공중기동기 (AN-2 포함)	훈련기	헬기
현황	820여 대	30여 대	330여 대	170여 대	300여 대

* 출처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p. 27.

라. 주요 위협요소

수단으로서 북한군의 군사력이 갖는 위협 차원의 의미는 어떤 의도로 수단을 강구하여 실제적인 타격능력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타격능력은 수단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뿐만 아니라 그 수단 자체에도 내포되어 있으므로 수단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현재의 수단 자체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수단 자체로서 군사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단순 수량 비교방법, 전력지수 평가방법, 워게임 방법, 군사비 투자 누계방법[44] 등을 들 수 있다. 각각의 방법이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지만 어느 방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한 정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43) 이민룡, 앞의 책, p. 116.

44) 이정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평가와 대남 군사위협의 변화”, 북한대학원대학교, 2014, pp. 304~310.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군사력 자체만으로는 전쟁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으로 군사적 능력과 국가 및 국민의 의지를 고려한 국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45]

전자의 방법으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와 비교해서 북한의 능력이 우월한지 또는 우리의 능력이 우월한지를 판단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도 우리의 의지보다 북한의 의지가 강하므로 북한의 실제적인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북한군의 재래식 군사력을 수단 자체로 보고 상대적 비교를 통해 특정 무기체계의 위협을 식별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5〉와 같다.

〈표 3-5〉 연도별 북한의 군사력 변화 추이(1996~2014 국방백서)

<table>
<tr><th colspan="4">구분</th><th>'96</th><th>'97</th><th>'98</th><th>'99</th><th>'00</th><th>'04</th><th>'06</th><th>'08</th><th>'10</th><th>'12</th><th>'14</th></tr>
<tr><td colspan="3" rowspan="4">병력</td><td>육군(명)</td><td>91만</td><td>99.6만</td><td>100.3만</td><td>100만</td><td>100만</td><td>100만</td><td>100만</td><td>102만</td><td>102만</td><td>102만</td><td>102만</td></tr>
<tr><td>해군(명)</td><td>4.6만</td><td>4.8만</td><td>5.4만</td><td>6만</td><td>6만</td><td>6만</td><td>6만</td><td>6만</td><td>6만</td><td>6만</td><td>6만</td></tr>
<tr><td>공군(명)</td><td>8.4만</td><td>10.3만</td><td>10.3만</td><td>11만</td><td>11만</td><td>11만</td><td>11만</td><td>11만</td><td>11만</td><td>11만</td><td>12만</td></tr>
<tr><td>계(명)</td><td>104만</td><td>114.7만</td><td>116만</td><td>117만</td><td>117만</td><td>117만</td><td>117만</td><td>119만</td><td>119만</td><td>119만</td><td>120만</td></tr>
<tr><td rowspan="18">주요장비</td><td rowspan="9">육군</td><td rowspan="3">부대</td><td>군단(급)</td><td>19</td><td>20</td><td>20</td><td>20</td><td>20</td><td>19</td><td>19</td><td>15</td><td>15</td><td>15</td><td>15</td></tr>
<tr><td>사단</td><td>60</td><td>60</td><td>62</td><td>63</td><td>67</td><td>75</td><td>75</td><td>86</td><td>90</td><td>88</td><td>81</td></tr>
<tr><td>여단</td><td>92</td><td>93</td><td>113</td><td>113</td><td>78</td><td>69</td><td>69</td><td>69</td><td>70</td><td>72</td><td>74</td></tr>
<tr><td rowspan="6">장비</td><td>전차(대)</td><td>3,800</td><td>3,800</td><td>3,800</td><td>3,800</td><td>3,800</td><td>3,700</td><td>3,700</td><td>3,900</td><td>4,100</td><td>4,200</td><td>4,300</td></tr>
<tr><td>장갑차(대)</td><td>2,600</td><td>2,270</td><td>2,300</td><td>2,300</td><td>2,300</td><td>2,100</td><td>2,100</td><td>2,100</td><td>2,100</td><td>2,200</td><td>2,500</td></tr>
<tr><td>야포(문)</td><td>10,850</td><td>11,200</td><td rowspan="3">12,000</td><td rowspan="3">12,000</td><td rowspan="3">12,500</td><td>8,700</td><td>8,500</td><td>8,500</td><td>8,500</td><td>8,600</td><td>8,600</td></tr>
<tr><td>다련장/방사포(문)</td><td rowspan="2">12,500</td><td rowspan="2">12,500</td><td>4,600</td><td>4,800</td><td>5,100</td><td>5,100</td><td>4,800</td><td>5,500</td></tr>
<tr><td>지대지유도무기(기)</td><td>60</td><td>8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r>
<tr><td rowspan="9">해군</td><td rowspan="4">수상함정</td><td>전투함정(척)</td><td>434</td><td>430</td><td>440</td><td>430</td><td>430</td><td>430</td><td>420</td><td>420</td><td>420</td><td>420</td><td>430</td></tr>
<tr><td>상륙함정(척)</td><td></td><td></td><td rowspan="3">510
(해경정 포함)</td><td rowspan="3">470
(해경정 170)</td><td rowspan="3">470
(해경정 170)</td><td>260</td><td>260</td><td>260</td><td>260</td><td>260</td><td>260</td></tr>
<tr><td>기뢰전함정(척)</td><td></td><td></td><td>30</td><td>30</td><td>30</td><td>30</td><td>30</td><td>20</td></tr>
<tr><td>지원함정(척)</td><td>330</td><td>340</td><td>30</td><td>30</td><td>30</td><td>30</td><td>30</td><td>40</td></tr>
<tr><td colspan="2">잠수함정(척)</td><td>26</td><td>40</td><td>40</td><td>90</td><td>90</td><td>70</td><td>60</td><td>70</td><td>70</td><td>70</td><td>70</td></tr>
<tr><td rowspan="4">공군</td><td colspan="2">전투임무기(대)</td><td>850</td><td>850</td><td>850</td><td rowspan="2">850</td><td rowspan="2">870</td><td>830</td><td>820</td><td>840</td><td>820</td><td>820</td><td>820</td></tr>
<tr><td colspan="2">감시통제기(대)</td><td rowspan="3">500
(지원기)</td><td rowspan="3">510
(지원기)</td><td rowspan="3">520</td><td>30</td><td>30</td><td>30</td><td>30</td><td>30</td><td>30</td></tr>
<tr><td colspan="2">공중기동기(대)</td><td rowspan="2">840
(헬기포함)</td><td rowspan="2">840
(헬기포함)</td><td rowspan="2">520
(지원기)</td><td rowspan="2">510
(지원기)</td><td>330</td><td>330</td><td>330</td><td>330</td></tr>
<tr><td colspan="2">훈련기(대)</td><td>180</td><td>170</td><td>170</td><td>170</td></tr>
<tr><td colspan="2">헬기(육·해·공군)(대)</td><td>290</td><td>310</td><td>320</td><td></td><td></td><td>320</td><td>310</td><td>310</td><td>300</td><td>300</td><td>300</td></tr>
<tr><td colspan="4">예비전력(명)</td><td>650</td><td>655만</td><td>745만</td><td>745만</td><td>748만</td><td>770만</td><td>770만</td><td>770만</td><td>770만</td><td>770만</td><td>770만</td></tr>
</table>

45) 이춘근,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위협 현황과 대응방안』,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2, p. 296.

1996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백서에 나타난 북한군의 군사력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정한 방향을 알 수 있다. 주요한 변화를 보이는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6〉과 같다.

〈표 3-6〉 북한군 군사력의 주요 변화

구분	변화 항목	비교 내용		증가율(%)
병력	총병력	'96년 : 104만	'14년 : 120만	15.4
	육군	'96년 : 91만	'14년 : 102만	12.1
	해군	'96년 : 4.6만	'14년 : 6만	30.4
	공군	'96년 : 8.4만	'14년 : 12만	42.9
육군 장비	전차	'96년 : 3,800대	'14년 : 4,300대	13.2
	장갑차	'04년 : 2,100대	'14년 : 2,500대	19.0
	방사포	'04년 : 4,600문	'14년 : 5,500문	19.6
	유도무기	'04년 : 60기	'14년 : 100기	66.7
해군 장비	잠수함	'96년 : 26척	'14년 : 70척	69.2

북한군의 병력 중 총병력은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약 15.4%가 증가하여 120만여 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정 시기와 병종별로 상이한 증가율을 볼 수 있다. 육군의 경우에는 1996년 91만여 명에서 1997년 99.6만여 명으로 9.5%가 증가하였고, 공군은 1996년 8.4만여 명에서 1997년 10.3만여 명으로 22.6%가 증가하였으며, 해군의 경우에는 약간 다르게 1996년 4.6만여 명에서 1998년 5.4만여 명으로 17.4%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대폭적인 병력의 증가 현상은 부대수의 변화나 잠수함정 및 야포의 수가 증가한 양을 고려했을 때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병력의 증가이유를 다른 원인에서 찾아야 하는데 가장 설명이 가능한 것이 당시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의 선군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김정일은 1993년부터 시작된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과 경제의 붕괴로 인해 '제2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돌파하기 위해 1995년 다박솔 중대를 방문한 이후 동원이 용이한 군을 중시하고자 선군정치를 내세웠는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군 병력을 증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주요 장비의 증가는 북한의 의도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차와 장갑차는 1980년대 기계화군단을 창설한 이후 속전속결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증강하였으며, 실제로 전차는 1996년 3,800여 대에서 2014년 4,300여 대로 13.2%, 장갑차는 2004년 2,100여 대에서 2014년 2,500여 대로 19.0% 증가하였다. 방사포와 유도무기는 기습공격을 위한 수단으로써 방사포는 2004년 4,600여 문에서 2014년

5,500여 문으로 19.6%, 유도무기는 2004년 60여 기에서 2014년 100여 기로 66.7% 증가하였다. 해군의 잠수함은 배합전과 기습공격을 위한 수단으로써 가장 증가폭이 크며 실제로 1996년 26척에서 2014년 70여 척으로 69.2%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주요 군사력의 증가는 북한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적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을 북한군은 현재까지도 재래식 군사력의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북한군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은 남북한의 군사력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북한군에 비해 열세한 부분을 들 수 있다. 2014년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열세한 부분은 육군의 야포와 해군의 상륙함정, 공군의 전투기와 공중기동기를 들 수 있다. 육군의 야포는 남한의 5,600여 문에 비해 북한은 8,600여 문을 보유하여 우세하며 이것은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이다. 해군의 상륙함정은 남한의 10여 척에 비해 북한은 260여 척을 보유하여 우세하고, 이러한 전력은 기습공격과 배합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이다. 물론 북한의 상륙함정이 공기부양정이나 고속상륙정과 같이 소형이지만 속도를 위주로 기습을 하려는 북한의 군사전략적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전력임으로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협을 주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공군의 전투기는 남한의 400여 대에 비해 북한은 820여 대를 보유하여 두 배가 넘는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전투기에 대해 노후화와 연료의 부족 등을 들어 대등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기습적인 공격을 하려는 북한군의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력이므로 우리에게는 그 자체로 위협적인 것이다. 공중기동기는 남한이 50여 대를 보유한 반면 북한은 330여 대를 보유하여 압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공중기동기는 대부분 AN-2기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노후화된 장비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기습공격과 배합전을 수행하려는 북한의 군사전략적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전력이므로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2014. 10월 기준으로 국방백서에 나타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는 다음의 〈표 3-7〉과 같다.

〈표 3-7〉 남북한 군사력 비교

구분				남한	북한
병력			육군(명)	49.5만	102만
			해군(명)	7.0만(해병대 2.9만 포함)	6만
			공군(명)	6.5만	12만
			계(명)	63만	120만
주요장비	육군	부대	군단(급)	12(특전사 포함)	15
			사단	44(해병대 포함)	81
			여단	14(해병대 포함)	74(교도여단 미포함)
		장비	전차(대)	2,400(해병대 포함)	4,300
			장갑차(대)	2,700(해병대 포함)	2,500
			야포(문)	5,600(해병대 포함)	8,600
			다련장/방사포(문)	200	5,500
			지대지유도무기(기)	60(발사대)	100(발사대)
	해군	수상함정	전투함정(척)	110	430
			상륙함정(척)	10	260
			기뢰전함정(척)	10	20
			지원함정(척)	20	40
		잠수함정(척)		10	70
	공군	전투임무기(대)		400	820
		감시통제기(대)		60(해군 항공기 포함)	30
		공중기동기(대)		50	330
		훈련기(대)		160	170
	헬기(육·해·공군)(대)			690	300
예비전력(명)				310만	770만

* 출처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p. 239.

Ⅳ. 북한의 대남 재래식 군사력 운용 전망

1. 북한의 대남 재래식 군사력 운용의 역사

북한은 남한에 대해 6.25전쟁이 끝난 뒤부터 현재까지 재래식 군사력을 이용하는 군사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국방과 안보관계 인사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군사도발'이라는 용어는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를 자극함으로써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행위'[46]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46년 제1차 당대회를 통해 최초의 노동당 규약을 채택한 이후

46) 이미숙,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정책연구』 20권 2호, 2011, p. 130.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 “전국적 범위의 반제반봉건적 공산혁명 완수”라는 맑스-레닌주의를 통해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것을 당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47]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시도가 ‘도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1950년대 405건의 침투 및 국지도발에 이어 1960년대에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많은 1,340건에 달하는 도발을 자행 하였다.[48]

〈표 4-1〉 연대별 북한의 침투 및 국지도발 현황

구분	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계	3,040	405	1,340	409	228	231	292	10	22	26	32	45
침투	1,968	386	1,011	313	167	63	16	0	4	5	3	0
국지도발	1,072	19	329	96	61	168	276	10	18	21	29	45

* 출처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p. 251.

이러한 군사적 도발행위는 2000년대 첫 10년에 이르기까지 매 10년 단위로 200여 건을 상회하였으며, 북한 내부의 상황과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군사전략적 방향과 전술적 행태의 변모를 보여 왔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침투사례는 80년대의 167건에서 90년대에는 63건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국지도발 사례는 80년대의 61건에서 90년대에 168건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현재까지도 이러한 경향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북한이 대남 군사력을 운용함에 있어 냉전시대에는 직접침투 방법에 중점을 두었지만, 1990년대 초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냉전이 종식된 이후부터는 간접침투 방법이나 전략적 도발 방법에 주안을 두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49] 따라서 여기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 왔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의 재래식 군사력 운용방향을 추정해 보기 위해 북한의 도발행태가 변곡점을 맞는 냉전시대의 종식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시기로 구분하여 알아볼 것이다.

가. 냉전시대(6.25전쟁 이후~1980년대)의 대남 군사력 운용

북한은 6.25전쟁 직후의 시기에 대내적인 전후 복구를 위한 기간으로 활용하여 대남전략의 주안을 주로 평화공세에 의한 선전전에 두고 남북연방제, 군축제의 등 각종 방법을 제안하였다. 1956년 제3차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의 목적을 남한에 대한 적화 혁명의 완성에 둔 이후 남한에서 1960년대 초 남한의 사회적 혼란과 5.16 군사정변에 의한 반공을 국시로

---

47) 북한은 1956년 제3차 당대회를 통해 채택된 노동당규약에 당의 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 공산혁명 완수’, ‘공사주의 사회 건설’, ‘인민민주주의 제도 공고화’ 등으로 제시하였다.

48) 국방부, 『2014 국방백서』, p. 251.

49) 정재욱, “북한의 군사도발과 전략적 과제”,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타 간행물』,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p.190.

삼는 군사정권의 집권에 따라 위기의식을 가졌고, 베트남에서 남쪽의 민주주의 정권과 북베트남의 공산정권 사이의 전쟁을 통해 남한을 무력으로 적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회의 인식은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추진으로 남한에 비해 국력이 우월하다는 판단 아래 64. 2월 남한에서의 남베트남과 같은 혼란을 조성할 목표로 남한 내 혁명역량을 조성하기 위해 3대 혁명역량 강화를 천명하고, 66. 10월 당표자대회에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해 북한 전역의 혁명기지화를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 내 반전 및 철수 여론이 확산되자 북한은 동일한 상황이 남한 내에서도 연출되기를 기도하면서 남한 내 극도의 혼란조성과 미군철수를 강요하기 위해 대담한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은 남북한의 국력 차이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게릴라식 침투에 의한 군사적 행동에는 전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데땅트'라는 화해의 분위기에 편승한 북한은 한국이 제의한 남북대화에 응하였고 그 결과 7.4 공동성명과 일련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남한정부의 반공정책에 변화가 없자, 1974년부터 북한은 평화적 방법의 가면을 벗고 대통령 암살기도, 땅굴 굴착 등 적극적인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 특히 1976. 7월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휴전협정 당사국 회의' 개최 제안 등으로 한반도 긴장완화공세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자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린 북한은 판문점 도끼만행이라는 미군을 직접 겨냥한 도발을 감행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내부적으로 권력 이양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것과 남한의 제5공화국 집권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틈타 다시 호전적인 도발을 감행 후 평화공세를 시도하는 기존의 군사적 도발이라는 시도로 다시 환원되었다. 즉, 북한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남한국민의 '강요된 지지'를 받고 있다는 판단 하에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고, '87년 절정에 달한 민주화 투쟁이 6.29선언으로 안정되자 정치적 혼란을 재조성하고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KAL기를 폭파하는 국제적인 도발을 감행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시기 두 차례의 도발은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즉, 도발의 무대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무대로 확장되었다는 점과 군사적 정면충돌을 피하고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은밀한 수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철저히 범행을 위장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밝혀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결국 적극적인 대응시기를 놓쳤다. 이는 향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군사적 행동이 노출되는 양상에서 벗어나 은밀한 군사적 공격 행동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50]

북한이 6.25전쟁 이후 냉전시대에 보인 군사적 도발의 특징은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남한에 비해 경제적으로 앞섰다는 판단 아래 남한을 적화하여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군사적 행동을 시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여건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6.25전쟁 이후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키려는 남한의 시도가 체제 자체의 특성상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혼란한 양상이 나타난 것에 비해 6.25전쟁 이전의 상황과 변함없이 김일성에 의한 1인 통치 및 독재체제가 정착할 수 있었던 북한의 자신감에서 연원하였다고 볼 수 있다. 냉전시대에 북한의 의도가 반영된 군사력 운용은 반복적인 직접침투와 다양한 군사적 도발로 나타났으며 그 현황은 다음의 〈표 4-2〉와 같다.

〈표 4-2〉 냉전시대 북한의 주요 군사적 도발 사례[51]

연대	주요 사례	특징	비고
1950	• '54. 8. 24 충남 풍세면 무장간첩 침투 • '58. 2. 16 KAL 여객기 '창랑호' 납치 • '58. 4. 10 공군 C-46 수송기 납치기도 • '58. 9. 6 경기 파주 무장간첩 침투 • '59. 7. 22 대구 팔공산 무장간첩 침투	• 정치적 테러리즘 정책 시행 • 지속적 대남도발 자행	이승만 정부
1960 ~ 1970	• '60. 5. 4 서해 해군경비정 포격 • '62. 12. 23 연평도 유엔군 초계정 공격 • '64. 1. 14 공군 F-86D 전투기 격추 • '67. 1. 19 동해 해군경비정 '당포함' 격침 • '68. 1. 21 청와대 습격-대통령 암살기도 • '68. 1. 23 미군 '푸에블로'호 납치 • '68. 10. 30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 '69. 4. 15 EC-121 미군정찰기 격추 • '69. 10. 11 흑산도 무장간첩선 침투 • '70. 6. 5 연평도 해군방송선 납치 • '71. 6. 1 소흑산도 무장간첩선 침투 • '73. 3. 7 철원 비무장지대 아군 총격 • '73. 10~'76. 9 서해 5도 영해·영공 침범(30여 회) • '74. 6. 28 해경 '863'정 격침 • '74. 8. 15 대통령 암살기도 • '74. 11, '75. 3, '78. 10, 서부·중부 침투·공격용 땅굴 구축 • '76. 8. 18 판문점 도끼 만행 • '78. 11. 7 충남 홍성 무장간첩 침투 • '79. 7. 21 경남 남해 무장간첩선 침투	• 남북한 체제 경쟁기 • 본격적인 대남도발 자행기 • 조직적의도적 대남도발	박정희 정부

50) 강창국, "북한 대남전략 차원의 도발과 한국의 대응 방안", 『한국콘텐츠학회지』11권4호, 2013, pp. 27~28.

51) 강창국, 앞의 논문, p. 28.; 이윤규, 『북한 대남 침투도발사』, 파주: 살림출판사, 2014, pp. 18~55.;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처, 『38선에서 아웅산묘소까지』, 1985, pp. 120~236.;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1981~2000)』, 2010, pp. 274~285.

연대	주요 사례	특징	비고
1980	• '80. 3. 23 한강 하구 무장공비 침투 • '80. 6. 21 충남 서산 무장간첩선 침투 • '81. 6. 29 임진강 필승교 무장공비 침투 • '82. 5. 15 강원 고성 무장공비 침투 • '83. 6. 19 파주 문산천 무장공비 침투 • '83. 10. 9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대통령 암살기도 • '83. 12. 3 부산 다대포 무장간첩선 침투 • '86. 9. 14 김포공항 입국장 폭파 • '87. 11. 29 KAL 858기 폭파	• 대남도발 절정기 • 한국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	전두환, 노태우 정부

* 출처 : 강창국, "북한 대남전략 차원의 도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콘텐츠학회지 11권 4호, 2013, p. 28.; 이윤규, 『북한 대남 침투도발사』, 파주: 살림출판사, 2014, pp. 18~55.;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처, 『38선에서 아웅산묘소까지』, 1985, pp. 120~236.;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1981~2000)』, 2010, pp. 274~285. 참조, 재정리.

나. 냉전 시대 이후(1990년대 ~ 현재까지)의 대남 군사력 운용

1989년부터 시작된 공산권의 붕괴는 1990년 말 소련연방의 해체와 더불어 사실상의 냉전이 종식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공산권의 붕괴로 인한 정치·심리적 충격과 함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아울러 1994. 7. 8일 김일성 사망과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이후 1995년부터 시작된 홍수피해로 인한 식량난과 함께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난은 북한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적화혁명이라는 노동당의 목적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전환하면서 남한에 대한 적화혁명을 위한 동조세력의 규합과 여건조성을 위한 의도로 재래식 군사력을 이용하여 1980년대보다 더 많은 직접침투를 시도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침범과 같은 국지적인 도발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남북 간의 대화를 매개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한편에서는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을 추구하면서 위장평화 공세와 군사적 도발을 병행하는 화전양면전술을 시도하였다.[52)]

1990년대 북한의 침투와 도발은 내부의 경제적 상황 악화라는 국면을 호도(糊塗)하면서 국제적인 고립의 탈피와 체제의 생존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중립국감시위원회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 기간 중 북한은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침범 등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였다. 또한 '나진선봉 지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선전하는 한편으로 1996. 9. 18일 강릉 지역에 잠수함을 이용하여 무장간첩을 침투시켰다. 서해에서는 1999. 6. 7일부터 6. 15일까지 9일 간에 걸쳐 북한 경비정들이 연평도 인근 해상의 군사분계선을 수차례 침범하는 도발행위를 계속하다가 급기

52) 이윤규, 위의 책, pp.56~58.

야 6. 15일 '제1연평해전'을 일으켰다.

2000년대 들어서서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의 결과물로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등으로 남북 간의 긴장상태가 완화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의 '제2 연평해전'과 2003년의 여수 반잠수정 침투 등 대남 적화혁명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다. 국민의 정부를 계승한 참여정부에서도 대북지원정책을 계승하여 남북정상회담과 개성공단 가동 등 활발한 남북 간의 교류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북 유화정책은 남한 내의 종북세력 확대와 이로 인한 남남갈등이 증폭되는 등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을 위한 남남 간의 분리 시도가 성과를 가져왔다. 특히 참여정부 기간 중에는 대남 도발과 직접침투 등은 없었지만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을 통한 2006년의 1차 핵실험, 전략 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군사력을 증강하여 대남 적화혁명의 완수를 위한 군사적 역량을 계속 강화하였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하여 2008년 금강산 관광객 살해와 2009년 제2차 핵실과 '대청해전' 등 대남 군사적 도발이 강화되었다.

2010년대에 들어 와서는 더욱 경색된 남북관계와 2011년 김정일의 사망에 이은 김정은의 권력승계 전후의 북한은 이전보다 더 과감한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도발과 비대칭 군사력을 이용한 도발을 감행하였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어 2013년 3차 핵실험 등 대남 적화혁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또한 2015년에는 비무장지대 아군 GP에 목함지뢰를 설치하여 폭발하게 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2000년 이후에도 계속된 식량난과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따른 고립 등 대내외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정치를 내세워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면서도 군사력을 강화해 왔다. 3대 세습을 완성하고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은 핵무장과 경제발전을 병행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SLBM 개발 시험 등 비대칭 군사력의 강화와 아울러 재래식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도발은 다음의 〈표 4-3〉과 같다.

〈표 4-3〉 냉전시대 이후 북한의 주요 군사적 도발 사례

구분	주요 사례	특징	비고
1990년 대	• '92. 5. 21 철원 비무장지대 무장간첩 침투 • '95. 10. 17 임진강 벼락바위 무장간첩 침투 • '96. 9. 18 강릉 대포동 해안 잠수함 침투 • '97. 8. 2 거제도 해안 부부 무장간첩 침투 • '98. 6. 22 속초 해안 유고급 잠수함 침투 • '98. 7. 12 묵호 해안 유고급 잠수함 침투 • '98. 11. 20 강화도 해안 간첩선 침투 • '98. 12. 17 여수 해안 반잠수정 침투 • '99. 6. 15 제1 연평해전	• 대남 도발 지속기 • 계속적·지속적 대남도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2000년 대	• '01. 11. 27 파주 서부전선 아군 GP 총격 • '02. 6. 29 제2 연평해전 • '03. 2. 20 미그-29기 1대 연평도영공 침범 • '03. 7. 17 연천 중부전선 아군 GP 총격 • '03. 10월 ~ '04. 11월 서해 NLL 10여 회 침범 • '08. 7. 11 금강산 관광객 살해 • '09. 11. 11 대청해전	• 의도적 고강도 대남도발 • 우호적 관계와 무관하게 대남도발 자행 • 조직적의도적 대남도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2010년 대	• '10. 3. 26 천안함 폭침 • '10. 11. 23 연평도 포격 • '14. 3월 ~ 4월 무인기 침투 • '14. 10. 10 연천 대북전단 격파 사격 • '15. 7. 11 북한군 10여명 군사분계선 침범 • '15. 8. 4 비무장지대 아군 GP 목함지뢰 매설/폭발 • '15. 8. 20 연천 대북 확성기 포격 • '16. 2. 8 북 경비정 서해 NLL 침범	• 의도적 직·간접적 고강도 대남도발 • 의도적 대남관계 긴장조성	이명박, 박근혜 정부

* 출처 : 강창국, "북한 대남전략 차원의 도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콘텐츠학회지 11권 4호, 2013, p. 28.; 이윤규, 『북한 대남 침투도발사』, 파주: 살림출판사, 2014, pp. 56~77.; 국방부, 『국방백서(2002~2014)』;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1981~2000)』, 2010, pp. 274~285. 참조, 재정리.

2. 향후 북한의 대남 재래식 군사력 운용 전망

북한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재래식 군사력을 운용할지를 예측하는 것은 그들의 폐쇄적 속성과 남북관계, 대미관계, 국제정세 등 많은 변수가 있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과거의 침투 및 도발 사례의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방향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우선 남북관계의 변수에 있어 북한에 우호적인 남한의 정부가 등장하면 도발을 자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군사적 목표가 수립되면 우호적 관계와 무관하게 고강도의 도발을 자행하였다. 반면, 남한의 정부가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을 때는 우리의 취약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도발 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고강도의 도발을 감행함으로

써 남한 내의 갈등을 최고조로 유발하였다.[53] 대미관계의 변수는 대부분 핵무기나 전략적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도발을 감행하였다. 국제정세의 변수에 있어서는 최근의 유엔을 통한 국제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암묵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생활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를 비롯한 비대칭 군사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당의 목적인 남한에 대한 적화혁명의 완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래식 군사력과 비대칭 군사력을 배합한 다양한 도발을 통해 남한 내의 동조세력을 규합함으로써 남한의 사회를 분리하는 목표와 미국을 위협함으로써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의 연합전력을 분리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을 운용하려는 방향은 이미 그들의 의도와 그에 따른 재래식 군사력의 건설에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적화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소규모 군사력을 운용하여 도발을 감행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대규모 군사력을 운용하여 우리의 영토 일부 또는 대부분을 석권하려고 할 것이다.[54] 북한의 향후 도발과 관련한 군사력의 운용은 재래식 군사력과 비대칭 군사력의 배합 운용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여기서는 재래식 군사력의 운용에 대한 방안을 예측해 볼 것이다.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을 운용하기 위해 분명한 의도를 유지해 왔고, 그러한 의도 하에 수단으로서 군사력을 건설해 왔으므로 북한의 의도와 수단을 결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북한의 의도와 수단의 결합은 다음의 〈표 4-4〉와 같다.

〈표 4-4〉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운용을 위한 의도-수단의 결합[55]

구 분		의 도	
		여건 조성	결 전
수단	일부 군사력 운용	- 국지도발 - 침투/도발	- 남한 영토 일부 석권
	전체 군사력 운용	- 전체 한반도 석권(여건조성과 결전의 연결)	

53) 오일환, “북한의 무력도발과 대화공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모색”, 『통일전략』11권1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 pp. 240~241.

54) 정경환, “북한의 협상전략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대응전략”, 『통일전략』9권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9, p. 150.

55) 연구자가 앞의 II장과 III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가. 대남 적화혁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군사력 운용

북한이 도발이라는 형식으로 재래식 군사력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건설한 군사력 중 남한에 대해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우월한 군사력을 이용해야만 한다.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우월한 군사력은, 지상군에서는 야포와 방사포, 특수전 병력이, 해군에서는 상륙함정과 잠수함이, 공군에서는 전투기와 AN-2기 등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의 위협으로 거론된 침투/도발용 또는 전면전을 위한 땅굴과 최근에 위협으로 드러난 무인기가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이후에 보여준 북한의 도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이러한 군사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배합하여 군사력 운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사용한 효과 극대화 방법은 은폐와 노출, 기습인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방법은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이다.[56]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을 운용하여 적화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시도는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1) 병종별 단독 군사력 운용

육·해·공군 병종별 단독적인 군사력 운용은 북한의 도발 역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기습을 전제로 할 것이며, 은폐와 노출 여부는 요망하는 효과와 도발 수단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병종별로 우월한 군사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북한은 항상 갖고 있다. 그것이 남한 내부의 혼란을 부추겨 남남 간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든지 재래식 군사력을 운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지상군 전력 중 단독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연평도 포격과 같이 미군이 개입하기 어려운 곳을 야포나 방사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의 섬들 중 어느 한 곳을 표적으로 삼아 대량으로 포격을 가하는 것이다.[57] 보다 과감한 시도로 수도권에 대한 포격 도발도 남한의 혼란을 극대화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서울과 그 인근 도시들을 수도권으로 본다면 북한은 포병만으로도 수도권을 공격 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70미리 자주포와 240미리 방사포는 “현재 배치 된 진지에서 수도권에 한 기습 집중 사격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58]

해군 전력을 이용한 도발 방법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잠수함을 이용한 도발일 것이다. 이미 북한은 1996년부터 몇 번에 걸친 잠수함을 이용한 침투/도발의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은밀한 기동이 가능한 잠수함을 이용하여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예를 들

---

56) 이윤규, 앞의 책, pp. 94~97.

57) 이춘근, 앞의 책, p. 334.

58) 박휘락, 앞의 논문, p. 114.

어 잠수함으로 은밀하게 기동하여 동해나 서해의 주요 군사기지나 산업시설을 어뢰로 공격하고 도주하여 자체의 폭발사고로 위장을 기도함으로서 우리의 효과적인 대응과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남한의 혼란과 분열을 시도하려 할 수 있을 것이다.[59]

공군 전력 중 침투/도발을 위한 전력은 무인기로 정찰용과 공격용 무인기가 공히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찰용 무인기는 운용한 사례가 있었고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례가 없는 공격용 무인기는 은밀 기동이 가능하여 남한 내의 주요 군사기지나 대중 이용시설에 대한 한 번의 공격으로도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도발 수단이 될 것이다.

기타 땅굴을 이용한 침투/도발은 1980년대 이후의 사례는 없지만 군사시설의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북한의 행태를 보면 향후 땅굴을 이용한 침투도발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무장지대에서의 도발은 2015년 GP 지뢰매설과 같은 유형의 사례 또한 언제든지 가능한 침투/도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2) 병종 간 배합 군사력의 운용

병종 간 배합 군사력은 북한이 우월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침투자산을 이용하여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키고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유용하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북한이 대부분 비무장지대로 설정되어 있는 지상으로 최소한 중대급 이상의 병력을 고속으로 침투시켜 국지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우리의 철책과 지뢰지대, 과학화 경계시설 등의 운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채택할 수 있는 은밀 고속침투 방법은 해상이나 공중을 통한 특수부대의 운용이다.

북한이 보유한 해상 기동수단인 공기부양정이나 고속상륙정은 중대급 부대 이상의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으므로 당야에 동해나 서해의 연안지역에 상륙침투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야간이라 할지라도 소음과 레이더에 포착될 수 있어 침투부대의 이동이 노출되는 위험이 있지만 일부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남한의 내부를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고강도의 도발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잠수함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특수전 부대를 기동시켜 침투부대로 운용하여 도심지에 대한 혼란을 조성할 있을 것이다.

공중을 이용한 침투를 위한 특수전 부대의 이동은 AN-2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은밀기동이 가능한 AN-2기를 이용하여 중대급 이상의 부대를 침투시켜 후방을 교란하는 것은 언제든지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침투/도발 방법일 것이다.

---

59) 이춘근, 앞의 책, p.

나. 남한의 영토에 대해 결전을 하기 위한 군사력 운용

북한이 시도하리라고 예상되는 남한 영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석권하기 위한 결전은 바로 전쟁을 의미한다. '군대, 군비, 전쟁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과 재산 또는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행위'[60]인 군사도발 중 국지적인 군사력 운용 행위를 뛰어넘어 영토를 점령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전쟁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각종 도발적인 군사력을 운용하여 국제정세와 남한 내부의 상황 등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남한에 대한 적화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군사력을 운용하여 결전을 시도할 것이다. 그 결전의 형태는 전면전으로부터 국지적인 전쟁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오직 재래식 군사력을 운용하는 전쟁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것이다.

먼저 국지적인 전쟁행위로서 단기간 전쟁으로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남한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는 시나리오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여러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제기한 서북 5도에 대해 북한이 기습적으로 상륙전을 감행하여 점령하는 것이다.

북한은 1970년 초반 이후 건조된 공기부양정과 고속상륙정 등 총 260척의 상륙함정과 소해정 30척을 보유하고 있고, 2개의 해상저격여단을 보유하고 있어 대형 상륙함이 없이도 단거리 기습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에 북한은 백령도에서 50~60km 떨어진 황해남도 고암포 인근에 고속 상륙작전 수행에 사용되는 공기부양정 기지를 완성했는데 이 기지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총 130여척의 공기부양정 중에서 60여척이 배치되면 1,800~3,000여명의 특수부대를 기습적으로 상륙시킬 수 있고, 따라서 서북 도서 기습 공격시간은 종전 4시간에서 30~40분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로써 북한은 한국의 증원군이 도달하기 이전에 상륙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61]

북한이 서해 5도 지역에 상륙작전을 감행할 경우 한국군은 당연히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의 상륙정을 공격할 수 있고, 그러한 상륙작전을 지휘 및 지원하는 북한군 부대를 공격할 수 있다. 지상군에 의한 상륙은 유엔헌장 51조에서 말하고 있는 무력 공격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 제2조 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 곧 "영토의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중하게 침해하고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북한 군인이 함정을 타고 한국의 영토를 공격하기 때문에 증거도 명확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대응의 절박성도 크다. 이 경우 역시 자위권의 적절한 범위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단호한 응징을 위해서는 상륙부대는 물론이고, 그것을 지휘하는 상급제대까지도 공격하여야 하지만, 그러할 경우에는 확전의 위

60)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 작전군사용어사전』, 2014, p. 71.

61) 박휘락, 앞의 논문, p. 115.

험성이 크다. 상륙작전과 함께 북한이 수도권에 포사격도 병행할 경우 자위권 행사의 범위는 더욱 복잡해진다. 한국은 상륙작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자위권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병력에 의한 공격은 심각한 침략행위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바로 전면전을 선포할 수는 없기에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철저한 상륙 대비태세를 구비함으로써 북한의 상륙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최선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북한의 기습적 상륙작전을 방어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예방적 자위권 차원에서 상륙작전을 준비하는 북한군을 사전에 공격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상정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국지전으로부터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물론 재래식 군사력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포함한 비대칭 군사력도 함께 운용되는 것을 상정해야만 한다. 이 경우 재래식 군사력의 운용은 비대칭 군사력을 운용하여 전면전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히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전면전에 대한 시나리오는 먼저 비대칭 군사력인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의 시사와, 사이버 공격을 통한 남한 사회의 기간 인프라와 정부 및 군의 지휘통제센터 동시적 공격, 중·단거리의 다양한 미사일과 300mm 방사포를 포함한 장사정포에 의한 전략적·작전적 표적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공격으로 공포와 혼란 극대화로 상당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재래식 군사력은 이때부터 운용되며, 먼저 전·후방 동시 배합전으로 수도권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과 더불어 AN-2기와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잠수함 등 기동수단을 이용하여 특수부대를 남한 깊숙이 지·해·공 3면으로 침투시켜 교란 및 와해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점령하고 항복을 요구한다. 우리가 이에 불응하면 북한은 우리의 대응에 맞춰 전 국토를 석권하는 작전으로 확대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침략작전 구상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고 한미연합군의 반격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면 핵무기와 전략미사일의 동시 다량투발을 위협하며 휴전협상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62]

북한은 한반도의 지형과 제해·제공권에 대한 부담으로 다양한 비대칭 전략 및 전술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의 대규모 특수전 부대에 대해서는 해·공군 위주의 정밀타격이 요망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파괴 자체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밀타격을 통한 파괴에도 많은 제한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녹음기에 작전이 계속 진행될 경우 해·공군 작전은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종심지역에서 지휘통제시설이나 전쟁지속능력을 파괴한다고 하더라도 전투력이 급격히 약화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

62)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미래 지상군 전투수행방안 연구』, 2010, p. 36.

V. 우리의 대책

1. 의도에 대한 대책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하고 그 수단을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는 대남 적화혁명의 완수에 있다. 특히 2016. 9. 10일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개정된 북한 노동당 규약은 북한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한반도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북한이 변함없이 '남조선 혁명' 전략을 고수하며 대남 적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입증해주고 있다. 북한은 남조선혁명론을 최종적인 귀결점으로서 북한정권 수립 이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및 강성대국론 등에 의한 혁명의 쟁취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63]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전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통일안보교육은 물론, 공안제도의 확립이 필수이다. 통일전선전략전술에 대비한 통일안보교육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체계의 확립과 '대한민국 정체성' 교육의 내실화[64] 에 있다. 독일의 경우, 아데나워 수상이 정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노선을 기민당 정권 시기나 사민당 시기를 막론하고 한시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관된 원칙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독은 동독의 통일전선에 쉽게 말려들지 않았고 오히려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인 동방정책(Ost Politik)[65]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통독 이전 서독은 동독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을 했지만 분명히 동독 독재정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았다. 대신 동독정권이 아닌 동독주민과 독일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지원에 전력을 다했다.[66]

---

63) 정경환, "북한의 협상전략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대응 전략," 『통일전략』, 9권 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9, p. 150.

64) 통일선선 세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체제를 부정하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세력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대한민국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국사교육의 강화와 대입 수능시험에서 국사의 필수화가 요구된다.

65) 사회민주당 소속으로서 1969년 패전 후 처음으로 자민당과 연합해 보수당인 기민당을 누르고 총리가 된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동서 화해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읽어내고 총리에 당선돼 동방정책을 실현함으로써 동서독 통일을 위한 기반을 쌓았다. 브란트는 집권 후 소련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사회주의 국가와 화해하고, 동방정책을 통해 동독과 교류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후 동방정책은 동독 개입 정책으로서 정권교체에도 흔들림 없이 수행된 결과 서독 주도의 통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또한 법질서의 정비를 통한 공안제도의 확립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고히 고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체제를 고무·찬양하는 명백한 이적행위에 대해서 법제도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안보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공안 관련 법·제도를 재정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한편, 북한의 반미자주화 차원의 통일전선전략전술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의 '자주' 조항에 대한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구호의 허구성에 대한 논리적 대응이 필요하다. 통일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분명하지만, 한반도 분단 자체가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 지정학적 요인이 결부되어 있어 국제적 협력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상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 등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 요인이 완전히 불식되고 동북아 지역에 다자안보체제의 확립 등 평화정착이 확고해졌을 때라야 가능한 일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전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교묘한 선전선동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사상전' 전개가 필수이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서 그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북한 및 친북좌파세력들이 전개하는 대남 선전선동에 대해 사안별로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그 부당성과 허구성을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북한 정권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이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국민의 대북 경각심이 크게 제고된 상황을 통일안보교육 강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라는 담론에 경도(傾度)된 나머지 안보의식이 크게 해이해졌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사회로 하여금 북한주민에 대한 연민의 정을 자아내게 함으로써 식량이나 비료 등의 지원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지만, 통일전선전략전술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 내에 친북 또는 종북(從北)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북한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 투쟁을 줄기차게 선동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이처럼 계산된 전략에 의해 '남남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우리의 내적 안보태세를 크게 흔들어 왔다는 것이다.[67] 그러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이러한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징조가

---

66) 정천구, "북한문제의 성격과 한국 통일전략의 방향,"『통일전략』, 10권3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9, p. 35.

67) 북한이 상투적으로 주장하는 민족공조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민족'의

엿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우리 국민이 전반적으로 국가안보 의식을 제고하는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은 곧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 있어서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 없이는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수단에 대한 대책

수단으로서의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자체에 대한 대응은 병력과 각종 무기체계를 절대적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각각의 요소별로 일대일 맞대응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방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군사력 중 상대적 수준에서 적절한 방어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증강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수단과 적절한 방어강도, 즉 감시능력과 타격능력을 일일이 검토하여 전력증강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의 군사력 자체만에 대한 대응보다 그들이 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단 그 자체가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선 군사력 자체에 대한 대응방안을 먼저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전력으로써 전략적 조기경보가 가능한 정보감시정찰능력과 전략타격능력, 그리고 실시간 작전지휘통제가 가능한 첨단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들 수 있다.[68]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기습을 방지하기 위해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독자적 감시 및 조기경보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전투력의 실시간 지휘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 지휘통제통신체계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 전략 및 전술 제대의 탐지-결심-타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자동화된 C4ISR 체계를 구축하고, 이의 생존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향상된 정보보호 능력과 적 정보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셋째, 적의 초전 기습을 차단, 격퇴하고 적의 2파, 3파 공습전력을 제압할 수 있는, 항공우

개념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은 '김일성 혁명전통'에 의해 왜곡·날조된 김일성 우상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날 북한에서 통용되고 있는 '김일성민족', '태양민족'이 그것이다. 김일성은 태양으로 상징화되어 있으며,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4.15일을 '태양절'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우리가 말하는 민족은 보편적 역사 속에서 형성된 개념이다.

68) 정춘일, "21세기 한국의 국방 비전과 군사력 발전 방향", 『국제정치논총』 36권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7, p. 421.

주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첨단 항공우주전력의 확보이다. 현대전 양상은 공지해합동전이면서도 특히 항공우주전력의 우세가 전쟁승패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가 지상에서 군사분계선을 아무리 철통같이 지킨다고 하더라도 공중전에서 패배하면 즉각 지해상 전선이 위태로워지고 결국 전쟁주도권을 상실한 채 수세에 몰려 패배하게 된다. 따라서 항공우주우세 확보를 위한 첨단 항공우주전력의 확보는 현대전 승리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적의 전쟁지도부와 군사지휘부를 포함한 전략적 중심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전략적 중심에는 적 공세전력의 근원인 항공력과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시설 및 장비가 포함된다. 이는 개전 초기에 제압하고 무력화시켜야 할 우선적인 표적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지의 표적들에 대한 식별 및 표적화 능력과 은밀하게 적진으로 침투할 수 있는 은밀침투능력, 그리고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다섯째,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세기동 전력과 한반도 주변 해양통제 및 원해/상륙작전 수행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필요한 물자들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맞춤식 군수지원보급체계를 구축하고 전투긴요물자 및 장비확보수준을 향상시키며 예비전력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운용에 대한 대책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운용에 대한 대응은 전략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가 추구하는 전략인 '능동적 억제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등 과거경험을 통해 한국과 직접교전 시 승산이 없음을 인지하고, 천안함 폭침 과 연평도 포격과 같이 자신이 선택한 유리한 시점과 장소에 기습적이고 교활한 방식으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한국군의 즉각적인 판단과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데 도발의 주안을 두고 있다. 우리는 천안함 폭침과 같은 은밀공격을 재감행시 즉각적인 대응 타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증거확보 후에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타격의 적절한 시점을 미리 판단해 두어야 한다. 또한 타격표적과 관련해서도 특수부대의 후방침투 등 원점타격과 지원세력에 대한 타격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피해에 상응하는 대용표적 타격도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한편, 우리 군의 성과를 최대화하고 적이 노리는 기습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국민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군이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더라도 승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며 또한 기습직후 일련의 대응태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국방커뮤니케이션의 강화가 필요하다.[69] 따라서 정부와 국방부의 언론브리핑 및 사건설명 등과 관련하여, 군사보안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신뢰성 있는 보도시스템을 완

벽히 구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능동적 억제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능동적 억제전략은 '실전수행에 기반하는 군사적 보복'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70] "모든 곳을 방비하다보면 모든 곳이 취약"해진다는 손자의 말처럼 북한 군사도발의 지속성과 그 유형의 교활성, 한국군의 국방예산의 가용성, 전투피로도 등으로 볼 때 북한군이 가할 수 있는 모든 위협을 분석하고 모든 전선에서 완벽한 도발대응태세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능동적 억제전략이란 기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데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적이 기습 시 성공적인 보복을 통해 기습의 연쇄고리를 끊어 버리겠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보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기습도발에 해 단순히 대응타격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우리의 보복능력과 신뢰성을 제고시켜 북한 지도부의 추가도발의지를 분쇄 하는데 필수적인 군사적 승리를 반드시 거두어야 한다.[71] 군사적 승리의 조건은 '적시'에 '적량'을 '적소'에 타격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도발양상 과 실전을 가상한 치한 계획·준비·연습·보완의 피드백이 요구된다. 특히 '적량'은 무기증강계획과 우선순위조정, 합동화력시스템을 연동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적시'와 '적소'를 판단하는 문제는 철저한 비가 요구된다.

둘째, 능동적 억제전략은 '북한의 내외적 정치적 목적 달성 거부'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북한 지도부가 도발을 통해 추구하려는 정치 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즉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할 때 북한의 추가도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김정은의 노동당과 북한군이 어떤 의도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증강해 나갈 것인지, 그 군사력을 어떤 방법으로 운용하여 우리에 대한 도발과 전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

---

69) 박창권,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사건의 군사적 교훈", 『한국의 안보와 국방』, 한국국방연구원, 2011, pp. 323-326.

70) MacGregor Knox and Williamson Murray, *The Dynamics of Military Revolution*, 1300-20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 23.

71) 박창희, "한국의 신군사전략 : '신 군사전략 개념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2011, p. 24.

리는 이에 대응하여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갖는 실제적인 세 가지 위협인 의도, 수단, 운용 요소들을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문헌연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의 의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북한은 헌법을 통해 우선적으로 조선노동당 유일의 지도 아래 집단주의적 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제1장 정치 분야의 제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명시하여 노동당의 유일한 지도를 받도록 하였다. 제10조에는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고 하였고, 제4장 국방분야의 제58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고 하였으며,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분야의 제6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국방에 대한 규정인 제4장에서는 제60조에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에 "국가는 군대 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 무장력(군사력)의 사명을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는데 있다'고 밝힌 제59조를 보완하는 북한 군사력의 건설과 운용에 대한 의도를 명시하였다.

군사전략적 의도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와 수단, 방법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단기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해야 할 군사력의 규모나 종류, 그리고 그 수단을 운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구상 등을 군사전략적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정치적 목적, 즉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인 남한의 적화혁명 완성을 달성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전쟁'을 추구해 왔다.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남한의 방위태세를 무력화 하는 것이 선결조건인 바 이러한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지속적인 여건조성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전면적인 "민족해방전쟁"이라는 결전(결정적인 전역: decisive campaign, 결정적 전투: decisive battle)을 시도할 것이다. 대남 통일전전선 전략의 수행의 일환으로 지지세력을 통해 남한 내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끊임없이 그들의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북한이 결전을 시도할 때의 군사전략적 의도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목표가 남한 영토의 일부 점령이든 전체 석권이든 기습공격과 배합, 속전속결을 추구하는데 있을 것이다. 북한의 전통적인 군사전략으로 알려진 세 가지 전략은 김일성의 유훈처럼 존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략을 구상한 이유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판단이 기저에 깔려 있다.

우선 한반도는 70%에 달하는 산악지형과 동서 방향의 폭이 좁고 남북 방향의 종심이 비교적 깊지 않으며, 특히 남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 서울이 휴전선과 근접해 있어 기습과 속전속결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의 주민들과 달리 남한에는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잔존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이 발달해 있어 다양한 종류의 군사력을 배합하여 남한 내에 혼란을 조장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 북한의 군사전략적 의도는 그들의 강점을 발휘하고 남한의 약점을 타격할 수 있는 방향에 지향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은 수단으로서의 북한군 재래식 군사력 건설에 대한 연구결과이다. 북한군의 병력 중 총병력은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약 15.4%가 증가하여 120만여 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정 시기와 병종별로 상이한 증가율을 볼 수 있다. 육군의 경우에는 1996년 91만여 명에서 1997년 99.6만여 명으로 9.5%가 증가하였고, 공군은 1996년 8.4만여 명에서 1997년 10.3만여 명으로 22.6%가 증가하였으며, 해군의 경우에는 약간 다르게 1996년 4.6만여 명에서 1998년 5.4만여 명으로 17.4%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대폭적인 병력의 증가 현상은 부대수의 변화나 잠수함정 및 야포의 수가 증가한 양을 고려했을 때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병력의 증가이유를 다른 원인에서 찾아야 하는데 가장 설명이 가능한 것이 당시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의 선군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김정일은 1993년부터 시작된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과 경제의 붕괴로 인해 '제2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돌파하기 위해 1995년 다박솔 중대를 방문한 이후 동원이 용이한 군을 중시하고자 선군정치를 내세웠는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군 병력을 증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주요 장비의 증가는 북한의 의도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차와 장갑차는 1980년대 기계화군단을 창설한 이후 속전속결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증강하였으며, 실제로 전차는 1996년 3,800여 대에서 2014년 4,300여 대로 13.2%, 장갑차는 2004년 2,100여 대에서 2014년 2,500여 대로 19.0% 증가하였다. 방사포와 유도무기는 기습공격을 위한 수단으로써 방사포는 2004년 4,600여 문에서 2014년 5,500여 문으로 19.6%, 유도무기는 2004년 60여 기에서 2014년 100여 기로 66.7% 증가하였다. 해군의 잠수함은 배합전과 기습공격을 위한 수단으로써 가장 증가폭이 크며 실제로 1996년 26척에서 2014년 70여 척으로 69.2%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주요 군사력의 증가는 북한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적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을 북한군은 현재까지도 재래식 군사력의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북한군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은 남북한의 군사력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북한군에 비해 열세한 부분을 들 수 있다. 2014년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열세한 부분은 육군의 야포와 해군의 상륙함정, 공군의 전투기

와 공중기동기를 들 수 있다. 육군의 야포는 남한의 5,600여 문에 비해 북한은 8,600여 문을 보유하여 우세하며 이것은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이다. 해군의 상륙함정은 남한의 10여 척에 비해 북한은 260여 척을 보유하여 우세하고, 이러한 전력은 기습공격과 배합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이다. 물론 북한의 상륙함정이 공기부양정이나 고속상륙정과 같이 소형이지만 속도를 위주로 기습을 하려는 북한의 군사전략적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전력임으로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협을 주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공군의 전투기는 남한의 400여 대에 비해 북한은 820여 대를 보유하여 두 배가 넘는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전투기에 대해 노후화와 연료의 부족 등을 들어 대등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기습적인 공격을 하려는 북한군의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력이므로 우리에게는 그 자체로 위협적인 것이다. 공중기동기는 남한이 50여 대를 보유한 반면 북한은 330여 대를 보유하여 압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공중기동기는 대부분 AN-2기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노후화된 장비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기습공격과 배합전을 수행하려는 북한의 군사전략적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전력이므로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의도와 수단의 결합을 통해 남한에 대한 국지적 또는 전면적인 도발이나 전쟁행위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이다. 먼저 국지적인 도발을 위한 군사력의 운용으로, 육·해·공군 병종별 단독적인 군사력 운용은 북한의 도발 역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기습을 전제로 할 것이며, 은폐와 노출 여부는 요망하는 효과와 도발 수단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병종별로 우월한 군사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북한은 항상 갖고 있다. 그것이 남한 내부의 혼란을 부추겨 남남 간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든지 재래식 군사력을 운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지상군 전력 중 단독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연평도 포격과 같이 미군이 개입하기 어려운 곳을 야포나 방사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의 섬들 중 어느 한 곳을 표적으로 삼아 대량으로 포격을 가하는 것이다. 보다 과감한 시도로 수도권에 대한 포격 도발도 남한의 혼란을 극대화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서울과 그 인근 도시들을 수도권으로 본다면 북한은 포병만으로도 수도권을 공격 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70미리 자주포와 240미리 방사포는 “현재 배치 된 진지에서 수도권에 한 기습 집중 사격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해군 전력을 이용한 도발 방법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잠수함을 이용한 도발일 것이다. 이미 북한은 1996년부터 몇 번에 걸친 잠수함을 이용한 침투/도발의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은밀한 기동이 가능한 잠수함을 이용하여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잠수함으로 은밀하게 기동하여 동해나 서해의 주요 군사기지나 산업시설을 어뢰로 공격하고 도주하여 자체의 폭발사고로 위장을 기도함으로서 우리의 효과적인 대응과 미군의 개

입을 차단하면서 남한의 혼란과 분열을 시도하려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군 전력 중 침투/도발을 위한 전력은 무인기로 정찰용과 공격용 무인기가 공히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찰용 무인기는 운용한 사례가 있었고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례가 없는 공격용 무인기는 은밀 기동이 가능하여 남한 내의 주요 군사기지나 대중 이용시설에 대한 한 번의 공격으로도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도발 수단이 될 것이다.

기타 땅굴을 이용한 침투/도발은 1980년대 이후의 사례는 없지만 군사시설의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북한의 행태를 보면 향후 땅굴을 이용한 침투도발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무장지대에서의 도발은 2015년 GP 지뢰매설과 같은 유형의 사례 또한 언제든지 가능한 침투/도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병종 간 배합 군사력은 북한이 우월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침투자산을 이용하여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키고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유용하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북한이 대부분 비무장지대로 설정되어 있는 지상으로 최소한 중대급 이상의 병력을 고속으로 침투시켜 국지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우리의 철책과 지뢰지대, 과학화 경계시설 등의 운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채택할 수 있는 은밀 고속침투 방법은 해상이나 공중을 통한 특수부대의 운용이다.

북한이 보유한 해상 기동수단인 공기부양정이나 고속상륙정은 중대급 부대 이상의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으므로 당야에 동해나 서해의 연안지역에 상륙침투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야간이라 할지라도 소음과 레이더에 포착될 수 있어 침투부대의 이동이 노출되는 위험이 있지만 일부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남한의 내부를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고강도의 도발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잠수함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특수전 부대를 기동시켜 침투부대로 운용하여 도심지에 대한 혼란을 조성할 있을 것이다.

공중을 이용한 침투를 위한 특수전 부대의 이동은 AN-2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은밀기동이 가능한 AN-2기를 이용하여 중대급 이상의 부대를 침투시켜 후방을 교란하는 것은 언제든지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침투/도발 방법일 것이다.

국지적인 전쟁행위로서 단기간 전쟁으로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남한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는 시나리오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여러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제기한 서북 5도에 대해 북한이 기습적으로 상륙전을 감행하여 점령하는 것이다. 북한은 1970년 초반 이후 건조된 공기부양정과 고속상륙정 등 총 260척의 상륙함정과 소해정 30척을 보유하고 있고, 2개의 해상저격여단을 보유하고 있어 대형 상륙함이 없이도 단거리 기습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에 북한은 백령도에서 50~60km 떨어진 황해남도 고암포 인근에

고속 상륙작전 수행에 사용되는 공기부양정 기지를 완성했는데 이 기지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총 130여척의 공기부양정 중에서 60여척이 배치되면 1,800~3,000여명의 특수부대를 기습적으로 상륙시킬 수 있고, 따라서 서북 도서 기습 공격시간은 종전 4시간에서 30~40분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로써 북한은 한국의 증원군이 도달하기 이전에 상륙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전면전에 대한 시나리오는 먼저 비대칭 군사력인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의 시사와, 사이버 공격을 통한 남한 사회의 기간 인프라와 정부 및 군의 지휘통제센터 동시적 공격, 중·단거리의 다양한 미사일과 300mm 방사포를 포함한 장사정포에 의한 전략적·작전적 표적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공격으로 공포와 혼란 극대화로 상당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재래식 군사력은 이때부터 운용되며, 먼저 전·후방 동시 배합전으로 수도권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과 더불어 AN-2기와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잠수함 등 기동수단을 이용하여 특수부대를 남한 깊숙이 지·해·공 3면으로 침투시켜 교란 및 와해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점령하고 항복을 요구한다. 우리가 이에 불응하면 북한은 우리의 대응에 맞춰 전 국토를 석권하는 작전으로 확대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침략작전 구상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고 한미연합군의 반격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면 핵무기와 전략미사일의 동시 다량투발을 위협하며 휴전협상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정책적 제언

북한의 의도인 대남 적화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통일안보교육은 물론, 공안제도의 확립이 필수이다. 대남적화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전술에 대비한 통일안보교육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체계의 확립과 '대한민국 정체성' 교육의 내실화에 있다. 공안제도의 확립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고히 고수할 수 있는 법질서의 정비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체제를 고무·찬양하는 명백한 이적행위에 대해서 법제도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안보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공안 관련 법·제도가 재정비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한편, 북한의 반미자주화 차원의 통일선술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전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교묘한 선전선동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사상전' 전개가 필수이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서 그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북한 및 친북좌파세력들이 전개하는 대남 선전선동에 대해 사안별로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그 부당성과 허구성을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단으로서의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자체에 대한 대응은 병력과 각종 무기체계를 절대적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각각의 요소별로 일대일 맞대응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방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군사력 중 상대적 수준에서 적절한 방어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증강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수단과 적절한 방어강도, 즉 감시능력과 타격능력을 일일이 검토하여 전력증강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의 군사력 자체만에 대한 대응보다 그들이 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단 그 자체가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선 군사력 자체에 대한 대응방안을 먼저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운용에 대한 대응은 전략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가 추구하는 전략인 '능동적 억제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등 과거경험을 통해 한국과 직접교전 시 승산이 없음을 인지하고, 천안함 폭침 과 연평도 포격과 같이 자신이 선택한 유리한 시점과 장소에 기습적이고 교활한 방식으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한국군의 즉각적인 판단과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데 도발의 주안을 두고 있다. 우리는 천안함 폭침과 같은 은밀공격을 재감행시 즉각적인 대응 타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증거확보 후에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타격의 적절한 시점을 미리 판단해 두어야 한다. 또한 타격표적과 관련해서도 특수부대의 후방침투 등 원점타격과 지원세력에 대한 타격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피해에 상응하는 대용표적 타격도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한편, 우리 군의 성과를 최대화하고 적이 노리는 기습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국민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군이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더라도 승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며 또한 기습직후 일련의 대응태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국방커뮤니케이션의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국방부의 언론브리핑 및 사건설명 등과 관련하여, 군사보안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신뢰성 있는 보도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고재홍, 『한국전쟁의 원인』,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국방부, 『국방백서』1999~2014.

김광수 외, 『북한 군사문제의 재조명』,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손자병법』

송대성, 『남북한 군사력특성과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세종연구소, 2002.서주석 외, 『북한의 체제와 정책』, 서울: 명인문화사, 2014.

육군본부, 『1129일 간의 전쟁 6.25』, 계룡: 국군인쇄창, 2014.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1981~2000)』, 2010.

이윤규, 『북한 대남 침투도발사』, 파주: 살림출판사, 2014.

이종학 편저, 『군사전략론』, 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9.

이종학 외, 『현대전략론』,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이춘근,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위협 현황과 대응방안』,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2.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처, 『38선에서 아웅산묘소까지』, 1985.

한국대통령학연구소, 『북한의 최신 법체계 연구』, 2009.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미래 지상군 전투수행방안 연구』, 2010.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 작전군사용어사전』, 2014.

2. 논문

강창국, “북한 대남전략 차원의 도발과 한국의 대응 방안”, 『한국콘텐츠학회지』11권4호, 2013.

고유환, “김정은 후계구축과 북한 리더십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45권5호, 2011.

구본학, “북한의 도전: 배경, 전망, 한국의 대응”, 『국제관계연구』 14권 2호, 2009.

길병옥, “동북아 질서 변화와 북한의 체제전환”,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2010.

김동엽,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 『현대북한연구』, 2015.

김동성,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전술과 대남 정치심리전”, 『전략연구』, 2015.

김창희, “제4장 김정은 체제 권력구조와 정치행태 분석”, 『통일전략』, 13권 1호, 2013.

김태현, “북한군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 『전략연구』22권 2호, 2015.

김흥광, “김정은정권의 대남전략의 특징과 변화” 선진화 정책시리즈, 2014.

모종린, “북한 의도의 불확실성과 남한의 대북정책”, 『전략논총』10호, 1998.
문일호, “북한 선군정치의 특성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1호, 2000.
박영자,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 2013년과 향후 전망”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4.
박영자,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통일정세분석』, 2013.
박종철, 박영호, 정영태, 최수영, 이기동, 장용석, 차문석 (201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 의 대책.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239.
박창희, “전략의 패러독스: 비대칭전에서의 ‘결전’과 ‘약자의 승리’”, 『한국정치학회보』43권 1호, 2009.
박창권,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사건의 군사적 교훈”, 『한국의 안보와 국방』, 한국국방연구원, 2011.
박창희, “한국의 신군사전략 : ‘신 군사전략 개념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2011.
박형중, “김정은 정권의 핵 및 대남 정책방향 진단” 『전략연구』, 2014.
박헌옥, “6 · 25전쟁에서 김일성의 역할과 북한군의 전쟁수행”, 『군사』63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7.
박휘락, “북한 도발 시 ‘단호한 대응’과 ‘확전방지’ 조화방안: 자위권과 교전규칙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54호, 2012.
서문기, “북한의 핵과 대응전략”, 『국방과 기술』397호, 2012.
안경모, “김정은 시대 북한 정치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 『아세아연구』 59권 2호, 2016.
안광수, “북한의 국지 군사도발에 대한 쟁점과 정책방향”, 『전략연구』, 2012.
윤진형,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비교 연구”, 『국제정치논총』53권 2호, 2013.
오일환, “북한의 무력도발과 대화공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모색”, 『통일전략』11권1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
오정수, “북한의 체제변동과 단계별 사회정책의 특성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연구』27권 1호, 2016.
이근욱, “군사전략과 국내정치”, 『전략연구』 16집 3호, 2009.
이미숙,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정책연구』 20권 2호, 2011.
이정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평가와 대남 군사위협의 변화”, 북한대학원대학교, 2014.
이창헌,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의 대외 정책적 함의”, 『정치정보연구』9권 1호, 2006.
정경환, “북한의 협상전략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대응전략”, 『통일전략』9권 2호, 한국통일전

략학회, 2009.
정응기,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기본원리-주체사상”, 『법학연구』 51-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정재욱, “북한의 군사도발과 ‘적극적 억지전략’의 구현 방향”, 『국제정치논총』52권 1호, 2012.
정재욱, “북한의 군사도발과 전략적 과제”,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타 간행물』,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정창현, “ 김정은시대 북한의 정책 전망과 남북관계”, 『역사와현실』84호, 2012.
정천구, “북한문제의 성격과 한국 통일전략의 방향,” 『통일전략』, 10권3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9.
조민,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전략과 통일정책”, 『통일정책연구』21권 2호, 2012.
조영국, “‘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 『현대북한연구』9권 1호, 2006.
진희관, “북한에서 ‘선군’의 등장과 선군사상이 갖는 함의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48권 1호, 2008.
채규철, “김정은 체제의 생존전략”, 『한국정치외교사논총』7권 1호, 2015.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12.
홍석훈, “김정은 정권의 신대외전략 분석”, 『정치정보연구』18권 2호, 2015.
황진환, “선군정치와 북한 군사부문의 변환전략”, 『국제관계연구』15권 2호, 2010.
MacGregor Knox and Williamson Murray, *The Dynamics of Military Revolution*, 1300-20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3. 기타

『아시아투데이』 2016. 5. 8일 기사
구글검색 자료, “북 재래식 군사력 증강에도 주목해야”,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e-yh-09012016164400.html (북한군 재래식 전력, 검색일 : 2016.9. 7)